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이교덕 · 이기현 · 전병곤 · 신상진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이교덕 · 이기현 · 전병곤 · 신상진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7,500원

ISBN 978-89-8479-697-3 9334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통일연구원
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시립대학교
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황 병 덕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팀장)	김 국 신 명예연구위원 김 규 룬 소장/선임연구위원 박 영 호 선임연구위원 여 인 곤 선임연구위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이 기 현 부연구위원 전 병 곤 소장/선임연구위원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강 동 완 교수(동아대) 김 갑 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 현 택 교수(한국외대) 박 인 휘 교수(이화여대) 서 동 주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 상 진 교수(광운대) 양 현 모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전 동 진 교수(신라대) 정 기 응 책임연구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최 용 환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한 인 택 연구위원(제주평화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이 진 원 교수	김 준 섭 교수(국방대) 이 지 영 전임연구위원(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목차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이기현·전병곤·신상진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4
3.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6
II. 중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11
1. 중국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13
가. 중국 외교의 목표와 특성	13
나. 중국의 공공외교 수용 과정과 추진 배경	18
2.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26
가. 중국 외교 추진체계	26
나. 중국 공공외교 추진체계	31
3. 사례연구: 중국의 대대만 공공외교	45
가. 대대만 공공외교 추진 조직과 기구	45
나. 대대만 공공외교 추진 목표와 방식	48
다. 대대만 공공외교 수단	51
라. 대대만 공공외교 성과	54
4. 중국의 공공외교 특성과 평가	57
III.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공공외교	61
1.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입장과 정책	63
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63
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	66
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입장	69

목차

2.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72
가.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	72
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와 주요 내용	79
다.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정부 조직 체계 및 프로그램	81
라.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민간 체계 및 프로그램	89
3. 전문가 인식조사	98
가. 중국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98
나. 중국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101
다. 중국 전문가 인식의 특징	132
IV. 결론: 통일관련 한국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137
1.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139
2. 대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과 과제	147
참고문헌	15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1

표 · 그림목차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이기현·전병곤·신상진

<표 II-1> 대만 주민의 자아 정체성	56
<표 IV-1> 각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적 평가 비율	142
<표 IV-2> 북중관계 강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143
<표 IV-3>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민과 중국민의 인식	148
<그림 II-1>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31
<그림 III-1> 중국 전문가의 소속 기관	100
<그림 III-2> 중국 전문가의 업무 경력	101
<그림 III-3>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102
<그림 III-4>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103
<그림 III-5> 중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103
<그림 III-6>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104
<그림 III-7>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105
<그림 III-8> 중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비중	106
<그림 III-9> 중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106
<그림 III-10>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107
<그림 III-11>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한 입장	108
<그림 III-12>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	109
<그림 III-13>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110
<그림 III-14>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	110
<그림 III-15>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주변국	111
<그림 III-16> 한반도 통일 시기	112
<그림 III-17> 중국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	112

그림목차

<그림 III-18>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인 형태	113
<그림 III-19>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급변 가능성	114
<그림 III-20> 북한 급변의 형태	114
<그림 III-21>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115
<그림 III-22>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116
<그림 III-23>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117
<그림 III-24>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수행기관	117
<그림 III-25>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118
<그림 III-26> 한국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118
<그림 III-27> 북한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119
<그림 III-28>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	120
<그림 III-29> 한반도 통일관련 중국의 공공외교 대상	121
<그림 III-30> 한반도 통일관련 중국 공공외교의 목표	122
<그림 III-31> 상대국 국민의 중국 이해에 대한 공자학원 프로그램의 기여도	123
<그림 III-32> 한국 내 중국 국가 이미지 개선에 대한 공자학원의 기여도	123
<그림 III-33> 양안통일 장애 요인	124
<그림 III-34> 중국의 대대만 공공외교 수단	125
<그림 III-35> 양안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125
<그림 III-36> 대만 주민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	126
<그림 III-37> 대만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	127
<그림 III-38> 대미 공공외교 정책	127

<그림 III-39> 양안통일 시기	128
<그림 III-40> 양안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상호 영향	129
<그림 III-41> 탈북자 정책 결정 요인	129
<그림 III-42> 중국 탈북자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	130
<그림 III-43> 중국 탈북자 정책과 한국과의 관계	131
<그림 III-44> 중국 외교부 공식성명 평가	131
<그림 IV-1> 공공외교의 흐름과 본 연구의 분석틀	140
<그림 IV-2>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흐름	147
<그림 IV-3> 대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	152



I 서론

1. 연구 목적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저비스(Robert Jervis)가 지적한 대로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바람직한 이미지와 평판은 그 국가가 가진 군사적·경제적 파워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¹ 나이(Joseph Nye)도 카(E. H. Carr)의 ‘여론에의 파워’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² 소프트파워란 매력과 관심을 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근래에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미지와 평판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중국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고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현재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전략은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발전을 위한 안정된 정치·경제적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지도부가 극복해야 하는 서로 연관된 안팎의 두 가지 도전들을 반영한 것이다. 안으로는 국민의 기대 상승과 급속한 사회 변화에 직면하여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느냐, 밖으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제 환경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후자의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하드파워(hard power)’는 분명히 급성장하였지만, 중국의 지도부나 일반 국민 모두는 그 발전을 지원하고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소프트파

¹ Robert Jervis,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²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ed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Joseph S. Nye Jr., *The Powers to Lea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Joseph S. Nye Jr., “Get Smart: Comining Hard and Soft Power,” *Foreign Affairs*, Vol. 88, No. 4 (July, 2009).

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경제적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경계할 필요가 없는 대국으로 비쳐 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인권 문제, 민주화, 소수 민족, 대만 문제, 무역 불균형, 위안화 평가 절상, 기후 변화 원인 제공,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자국의 매력 확산에 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은 자국의 정책과 행위들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대외소통(foreign communication)'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폭넓게 정의하면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과 소통하려는 국가의 의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³ 그것은 일방적일 수 있고, 쌍방향적일 수도 있으며, 상호 협력일 수도 있다.⁴ 전반적으로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바깥 세계에 주고자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관리하고, 어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파하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자신과 바깥 세계 사이에 어떤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목표와 정책을 관철하려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와 평판,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몰이해는 정책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주변국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불필요

³ 공공외교에 관한 정의와 연구에 관한 개관은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616, No. 1 (March 2008), pp. 31~54; Etyan Gilboa,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616, No. 1 (March 2008), pp. 55~77.

⁴ Geoffrey Cowan and Amelia Arsenault, "Moving from Monologue to Dialogue to Collaboration: The Three Layers of Public Diploma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616, No. 1 (March 2008), pp. 10~30.

한 갈등을 불러와 대외정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외정책의 하나인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시켜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즉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3개년 계획의 1차년도 연구이다. 최종 3차년도에 우리의 통일관련 공공외교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데, 그 선행작업으로서 2차년도에는 우리의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가 조사되고, 1차년도에서는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함께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공공외교, 특히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연구된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진행되는 주변 4강의 대한반도 공공외교 실태 가운데 중국의 공공외교에 관한 것이다. 국가수립 이후 중국이 공공외교를 추진한 배경과 그 과정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가? 공공외교에서 정부의 역할과 여타 제도적 및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외교 추진에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경험적으로 인식한 한계는 무엇인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어떠한가? 전체적으로 중국의 공공외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런 구체적 의문들을 제시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비작업이다. 이 예비작업은 중국의 공공외교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조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범주, 즉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분석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될 뿐이다. 중국의 공공외교 모두를 세세히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는 바도 아니다. 본 연구는 3년간의 연구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 즉 우리의 통일공공외교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실체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그 공백을 메우려는 작업이다.

3.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중국 공공외교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정책 결정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이 충분하지 않아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중국 공공외교에 관한 공식 문서는 매우 적고, 중국 정부는 대체로 자국의 정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더욱이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적인 조사도 용이하지 않다. 현 상황에서 조사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은 절대량이 부족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작성한 문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가 채택한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관련 문헌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다. 그리고 활용하는 자료의 대부분, 특히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자료는 주로 공공외교 행위들과 중국 지도자들의 언급에서 추론된 것들이다.

문헌의 내용 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 하나의 연구 방법은 중국의 공공외교에 밝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설문 조사는 개인의 지식에 의존해야 하고 각자의 견해나 관점이 쉽사리 투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종류의 모집단에 대해서든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조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데는 많은 조심성이 요구되지만, 어떤 특정의 주제에 관한 일정한 태도·의견·동기·가치 의식과 같은 자료를 얻는 데는 이 방법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문가 40명을 설문 조사했고, 설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출장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그들을 심층 면접했다. 전문가 40명은 오랫동안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료, 한반도 관련 여론을 선도하는 한국 담당 기자나 특파원 등 언론인, 한반도와의 경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인, 정부부처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참여와 영향을 미치는 연구원, 한반도 관련 인재를 양성하면서 정책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소속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이다. 사용한 설문은 총 4개 부분,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중국 공공외교의 전반적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이고, 2부와 3부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과 공공외교에 관한 설문, 4부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국적 특성, 특히 중국 공공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이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는 공공외교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 나라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공공외교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같이 견주어 보아야 중국 공공외교 나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분석을 또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 채택했다. 문헌분석, 전문가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비교분석 이외 마지막으로 언급할 연구 방법은 공동연구이다. 공공외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무수히 많다. 공공외교는 다양한 행위자가 활동하는 공간이자 문화 분야 등이 포함된 매우 폭넓은 연구 주제이다. 이 점에서 각양각색의 지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제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크게 II장과 III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장은 중국의 공공외교를 폭넓은 맥락에서 개괄한다. 공공외교도 외교의 한 축인 이상,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분리되어 전개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공공외교의 수용과 발전은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특성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국 외교정책의 전개와 더불어 공공외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추진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외교 테크닉과 정책들을 급속히 발전시켜 왔다. 그 여파의 하나로서 중국 공공외교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즉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외국의 공적·사적 행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국의 개인들과 시민사회 집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공외교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공외교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가이다. II장에서는 중국 공공외교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을 비롯한 추진체계도 개관하고, 장·단점을 논의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중국 공공외교의 특성을 좀더 명확히 보여 주고 여러 시사점을 얻기 위해 사례연구로서 중국의 대대만 공공외교도 분석한다. 사례연구는 일반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과학에서 흔히 쓰는 방법론이고 이론과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사례연구는 중국 공공외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일반화시키는 능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III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이다. 우선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고,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중국이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그것을 추진하는 체계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 조직, 수단, 주요 행위자, 통일관련 공공외교 대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이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서 거둔 성과와 실패를 진단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제시한다. 중국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는 외교정책 분야의 실무자들과 정책 형성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가를 포착할 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조사된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 인식도 비교된다. 비교분석은 중국의 전문가와
여타 국가 전문가 인식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중국
사례의 독특한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
이 있다.

I

II

III

IV



II

중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1. 중국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가. 중국 외교의 목표와 특성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이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외교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세계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세계질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해 왔다. ‘혁명 외교’에서 ‘발전외교’로 대외정책 노선을 전환했다.⁵ 1971년에는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국제기구인 유엔에 가입했고,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기존 세계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고속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해 온 미국과의 대결을 최대한 회피하고, 세계 및 지역 안보 문제를 협력을 통해 공동 관리하려는 타협 지향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해 온 중국으로서는 미국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대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취약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나라다. 더욱이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14개 국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주변 국가의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시적이며 잠재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핵심 외교정책 목표를 두고 주변국에 대해 선린, 안린, 부린의 ‘3린정책(三隣政策)’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신장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강

⁵ 趙可金, “建設性領導與中國外交轉型,” 『世界經濟與政治』, 2012年 第5期 (2012), pp. 43~47.

대국 지위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위협론’과 함께 ‘중국책임론’이 강도 높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지위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 2대 경제대국 지위에 부합하는 강대국 외교노선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질서의 민주화와 다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외교전략을 주문하고 있다.⁶ 이와 동시에 중국의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 내에서는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군사대국을 지향하게 되고,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지위에 정면 도전하게 될 것이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무력수단과 경제압박 카드를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유혹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주변국과 서방국가들은 부강한 중국이 세계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중국책임론’과 ‘중국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면서, 중국의 능력에 걸맞은 수준에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중국 외교의 또 다른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외교 목표와 정책 방침은 2011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⁷ 평화발전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이 평화발전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이라는 중국의

⁶ “社评：三沙市锻炼全中国的意志和胆略，” <<http://opinion.huanqiu.com/1152/2012-06/2847869.html>> (검색일: 2012.6.27); 중국 내에서 미국에 타협하지 말고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96년부터 제기되었다. 宋强·張藏藏·喬邊, 『中國可以說不:冷戰後時代的政治與情感抉擇』(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社, 1996).

⁷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 <<http://world.people.com.cn/GB/15598781.html>> (검색일: 2011.9.30).

국가정책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총 경작면적의 7.9%에 불과하지만 세계 총인구의 20%를 먹여 살려야 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2010년 1인당 국민 생산총액이 4,400달러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현대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 등 강대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평화발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주권, 국가통일, 정치제도 및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설정하고, 이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 등 강대국들과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전면적 전략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는 안보와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보이면서도 ‘전략 및 경제대화(S&ED)’를 통해 ‘건설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모색하고 있고, 일본과도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가 여전히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국가안보 면에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확대 정책에 맞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게다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강화와 같은 미국의 대동아시아 군사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동맹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대해

중국은 강한 위협을 느끼고, 동맹을 통한 안보를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 비판하면서 협력외교를 강조하고 있다.⁸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적극 주창하고, 국제안보문제 해결 과정에 유엔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발전 외교정책에 있어서 주변국 정책도 핵심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포섭 노력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⁹ 이에 중국은 주변국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망에 경도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동아시아 협력과정을 주도하려 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질서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영토 및 해양주권 문제를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해양 주권 문제에 관한 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이전 대화를 통해 인도와 부탄을 제외한 12개 접경국과의 육지 영토 문제를 완전 타결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분쟁을 덮어 두고 공동개발(擱置爭議, 共同開發)’ 한다는데 합의했다.¹⁰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이 해양 주권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일본·필리핀·베트남 등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편승하여 조어도(센카쿠)와 남사·

⁸ Michael D. Swaine, “Chinese Leadership and Elite Responses to the U.S. Pacific Pivot,”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8 (August 6 2012) <<http://media.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8MS.pdf>> (검색일: 2012); 沈强, “美國全球戰略調整: 戰略重心更多向亞太傾斜,” 『國際政治』, 2012年 第2期 (2012), pp. 84~91.

⁹ 周建仁, “聯盟形成理論: 評估及對中國的政策啓示,” 『當代亞太』, 2012年 第3期, pp. 59~63.

¹⁰ 李昊宇·馬坤, “中國東盟簽署宣言, 南沙不再建碉堡,” <<http://www.peopledaily.com.cn/GB/junshi/20021111/863355.html>> (검색일: 2002.11.11).

서사군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자, 해양 도서 문제는 중국의 심각한 안보적 도전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해양 도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자세는 해양자원 확보 필요성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대국화를 추구하면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 평화발전 노선을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본·필리핀·베트남 등과의 영유권 분쟁에 무력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 오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활동에도 참여하고, 이란과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지분을 확대하고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하여 세계경제질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국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협인식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중국의 실천에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미국과 함께 ‘G2’로 지칭하면서 국제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 나아가 ‘리더십 역할(Leadership Role)’을 주문해 왔다. 핵무기 실험 및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미는 중국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개

발도상국 지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G2' 국가 개념의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 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매력 있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위협론'과 '중국책임론'은 더욱 강력한 호응을 얻게 될 것이며,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중국의 이익보호 요구 압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나. 중국의 공공외교 수용 과정과 추진 배경

(1) 공공외교 수용 과정

공공외교의 용어와 개념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60년대였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사회주의 정권수립 이전부터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주의 진영 및 서방국가의 비정부 기관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전·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비록 처음부터 공공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공공외교를 수용·추진한 역사는 서방국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싼시성(陝西省) 옌안(延安)에 근거지를 두고 국공내전을 치르고 있었던 당시부터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일부 서방기자들을 초청하여 공산당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¹¹ 미국 국적의 에드가 스노(Edgar Snow) 기자가 그 대표적인 인사인데,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그에게 마오쩌둥(毛泽东)을

접견하고 옌안 혁명근거지를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서방세계에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 등 지도부의 실상을 알리도록 했다. 그는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을 발간하여,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周恩來)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혁명 열기와 리더십을 우호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중국공산당에 대한 서방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1970년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때에도 중국은 천안문 누각에서 마오쩌둥이 스노 기자와 환담하는 장면을 인민일보를 통해 대내외에 보도함으로써 대미 화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국기자를 활용하여 미국 국민들을 향해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중국은 미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정부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970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이전까지 중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는 50개국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은 정부 사이의 공식 외교관계 외에 ‘인민외교’와 ‘민간외교’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해야 했다. 이에 중국은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신문총서 내에 국제신문국을 설치하여 대외 홍보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한편, 자국에 우호적인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우의를 증진하고,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해소하고,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人民中國』, 『北京週報』, 『中國建設』, 『中國報道』 등을 5개국 언어로 발간하여 180여 개 국가에 배포했다. 중국은 문화예술단과 인민해방군 가무단을 파견하여 사회주의 형제국가들과 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 제3세계 지역에 대한 경제원조 및 기술지원을 통해 신중국에 대한

I

II

III

IV

¹¹ 이희옥, “중국공공외교의 확산: 체계와 목표,” 『중국학연구』, 제54집 (중국학연구회, 2010), p. 361; 이장원, “중국 공공외교: 배경, 목표, 전략,” 『동서연구』, 제23권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pp. 102~104.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했다. 또한 소련과 동유럽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상대국 국가 젊은이들과 친분관계 형성을 도모했다. 정부 간 공식 교류와 접촉이 어려웠던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은 민간교류·접촉을 통해 갈등관계를 완화하고 정부 간의 관계를 촉진한다는 전략을 추진했다. 소위 ‘이민촉관’(以民促官) 전략이다. 1970년대 초 미국과의 핑퐁외교와 대일 정경분리정책, 1970년대 말 이후 대만에 대한 ‘3통정책’(三通政策)과 해협양안관계협회를 통한 ‘반관반민 회담’도 중국이 상대방 정부와 공식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한 일종의 공공외교의 한 형태였던 것이다.¹² 정부 간 교류와 접촉이 어려운 나라와의 관계에서 중국은 문화계와 기업인이 먼저 나서고 외교관이 뒤따르는 형태로 대외관계를 추진했다.¹³ 중국의 민간외교와 반(半)관방외교를 주관해 온 기관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였다.

개혁·개방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외사무 수행에 지방정부와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외교에서 공공외교 활동이 과거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점유하게 되었다.¹⁴ 공공외교 수행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기구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의 주도 아래 다양한 비정부 단체와 조직이 중국의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1980년 중앙대외선전소조

¹² 중국은 대만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를 외교 관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 공공외교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조찬회의에서 필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자오치정 중국 정치협상회의 외사위 주임의 답변, 2012.7.5.

¹³ 베이징에서 자오커진 중국 칭화대학 교수와의 인터뷰, 2012.8.9.

¹⁴ Joseph Fewsmith and Stanley Rosen,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Does Public Opinion Matter?,”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151~187; 齊建華, 『影響中國外交決策的五大因素』(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0), pp. 218~260; 王存剛, “當今中國的外交政策: 誰在制定? 誰在影響?,” 『外交評論』, 2012年 第2期 (外交學院, 2012), pp. 1~18.

가 설립되었으며, 1991년 신설된 국무원 신문판공실 이외에 외교부, 문화부, 선전부, 대외연락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함께 CCTV, 중국국제방송국, 신화사, 인민일보 해외부서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들도 중국의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특히 개혁·개방기 중국이 대외 경제관계를 적극화하면서 대외 경제관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외교가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친민외교’(親民外交)를 표방한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 등장 이후부터였다. 2003년 이후 중국은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전개하여, 중국기업과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국 정부만을 중요한 외교 상대로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고, 해외에 진출한 중국기업과 중국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외교 역량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인들에게 중국이 직면한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했다. 또한 2003년 말 중국 지도부가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주창한 뒤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버전의 ‘중국위협론’이 제기되자, 중국은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론주도층에게 중국의 실상을 알리고 중국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대국’임을 역설하고자 했다.¹⁵ 2004년 중국 외교부 내에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공중외교처’가 신설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2008년에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의 공공외교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올림픽 개막식에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하여 140여 개 국가의 지도자들과 204개 국가의 1만여 명의 운동선수들을 참여시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이라는 모토 아래, 중국 국민과 세계인들 사이에 우호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중국의

¹⁵ 中華人民共和國 政策研究司 編, 『中國外交』(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5), pp. 44~46, 49~50.

국제지위와 위상을 제고했다. 또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올림픽 성화 봉송 의식을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진행하였으며, 올림픽에 참여한 각국의 선수단과 올림픽 행사를 주시하는 세계인들에게 중국이 국제평화를 애호하며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도 중국은 유교사상과 명나라 정허(鄭和)의 대항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녹색올림픽, 과학기술올림픽, 인문올림픽’을 기치로 내걸고 중국의 찬란한 문명과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를 전 세계에 선전했다. ‘문명, 민주, 진보, 개방’을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했다.¹⁶

베이징 올림픽의 핵심 이념으로 ‘인문올림픽’을 표방한 이후, 중국은 ‘인문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외국과의 정상회담 시에도 ‘인문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여 관철하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까지 포함하였다.¹⁷ 중국의 ‘인문외교’는 중국 국민과 세계인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실상을 알리고 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중국은 대외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공자학원과 중국문화원을 설치하여 중화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외국의 비정부기구, 엘리트, 싱크탱크, 학계 전문가와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여, 중국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중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유도하는데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¹⁸

¹⁶ 『學習時報』, 2008년 10월 6일.

¹⁷ 2007년 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문과 2008년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도 ‘인문외교’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中日关于全面推进战略互惠关系的联合声明,”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450471.html>> (검색일: 2012.10.7); “中韩联合声明,”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460923.html>> (검색일: 2012.10.7).

¹⁸ 『學習時報』, 2008년 10월 6일.

중국이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여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건설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 외교를 적극화한 데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국제 리더십 약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1년 부시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등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전략과 강압외교 수단이 무분별하게 행사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중국은 강제력보다는 문화적 수단 등 소프트파워를 동원하여 국제 이미지 제고와 영향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문외교,’ 즉 공공외교를 적극화했다.

2009년 7월 중국은 2004년 이후 5년 만에 재외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후진타오(胡锦涛) 주석은 공공외교와 ‘인문외교’ 강화 방침을 하달했다.¹⁹ 대외 문화교류 활동을 강화하여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고, 해외 중국인과 중국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국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공공외교와 ‘인문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중국의 공공외교의 중점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외 중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 중국의 국정을 알리고 중국에 대한 지지와 믿음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본격 전환되었다.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중국의 공공외교가 전방위, 다영역,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이 서방의 공공외교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개혁·개방 이후부터였기 때문에, 1990년대까지는 공공외교를 수용·도입하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국제활동 영역과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중국의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위협론’이 고조되면서, 중국 정부가 공공

¹⁹ “第十一次驻外使节会议召开 胡锦涛, 温家宝讲话,” <http://www.gov.cn/ldhd/2009-07/20/content_1370171.html> (검색일: 2012.9.19).

외교를 적극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식 공공외교’를 모색·추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⁰

(2) 공공외교 추진 배경과 목적

중국이 공공외교를 중요하게 활용하게 된 배경요인으로는 첫째, 중국 외교의 행위 주체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외교와 마찬가지로 공공외교의 핵심 행위자는 정부 기관이지만, 비정부 기관과 기업 및 개인들도 공공외교의 중요한 행위 주체이자 대상이다.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중앙 정부가 독점했던 대외관계를 지방 정부와 기업 및 개인들에게 일부 허용(下放)하게 되었다.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 및 소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기회를 확대하게 되었고, 연간 수백만 명의 중국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외국과 접촉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중앙 정부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할 수 없게 되었고, 각종 비정부 기구와 단체 및 개인들도 국제사회에 중국을 알리고 중국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주체가 되었다. 비정부기구와 기업 그리고 매력을 가진 개인들은 정치적 의도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중국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공공외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2003년 이후 중국이 ‘친민외교’(親民外交) 또는 ‘국민을 위한 외교’(外交爲民)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외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에 장기간 주재하거나 단기간 체류하는 중국 국민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저우추취(走出去)’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해외에 투자된 중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국 외교의 중요한 영역으로

²⁰ 이에 대해서는 자오치정, 『중국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가』 (파주: 나남, 2012), pp. 29~56 참조.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와 원자바오(溫家寶)지도부는 2003년 이후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중국 외교부 내에 설치된 공공외교 담당 부서 명칭을 공중외교처(公衆外交處)로 명명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과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외교 업무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외교부 청사를 개방하여, 외교부 관리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 부장 등 고위급 간부가 인민일보 ‘강국논단’(強國論壇) 등에 출연하여 중국 국민들과 온라인 대화를 가짐으로써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설명하고 외교부 문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도 광범위한 의미의 공공외교 활동이다.

셋째, 중국이 평화발전 외교정책 기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와 국민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와 달리 중국은 현재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외정책이 독단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각자 일정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각종 이익단체 및 오피니언 리더들도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2005년 초 중국 국민들의 악화된 반일 감정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로 하여금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도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교정책을 산출하기 위한

²¹ 鄭永年, “中國內部環境的變遷及其對外交的影響,”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8/forum_zp120221.shtml> (검색일: 2012.2.21).

노력이 필요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 아울러 타국 정부의 역할과 함께 타국의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국민들의 대중 인식과 태도가 이들 국가의 대중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정부 외교와 함께 공공외교/공중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²²

넷째,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중국위협론’을 완화하고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발전 목표, 발전모델과 외교안보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평화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부상한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강대국과 주변국들은 중국을 경쟁국 나아가 잠재적 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여 중국이 국제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라는 국제이미지(國際形象)를 구축하고, 미국이 독점해 온 국제여론 주도권(國際話語權)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이다.²³

2.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가. 중국 외교 추진체계

중국의 외교정책은 최고지도자를 비롯하여 소수의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공산당 중앙 핵심 멤버에 의해서 결정되며, 주요 외교정책 집행기관은 외교

²² 裘援平, “中國의和平發展與公共外交,”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6期 (中国国际问题研究所, 2010), pp. 1~2.

²³ 張志洲, “中國公共外交:讓世界了解一個真實的中國,” 『中國外交』, 2011年 第12期 (外交學院, 2011), pp. 58~60, p.62; 이희옥, “중국공공외교의 확산: 체계와 목표,” pp. 366~367.

부와 상무부 및 당 중앙 대외연락부 등이다.²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집권 시기에 중국의 대외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최고지도자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1950년에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 결정을 내린 것도 마오쩌둥이었다. 그는 린바오(林彪) 등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영내로 진격하자 곧바로 한반도에 병력을 파병했다. 1950년대 중후반 대만에 대한 포격과 1960년대 베트남 파병도 마오쩌둥의 지시 하에 결정되었다.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과 1992년 개혁·개방정책 가속화 방침을 결정한 것도 당시 중국의 ‘영도핵심’이었던 덩샤오핑이었다.

장쩌민(江澤民)이 집권했던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지도부가 집단지도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최고지도자 개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장쩌민은 대내외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따랐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당 총서기, 국가주석, 당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고 있었지만, 후진타오가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다. 외사영도소조(外事領導小組) 조장으로서 다른 8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보다는 더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단 1표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기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더욱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정책 결정체제의 변화는 앞으로 중국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민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변화는

²⁴ Lu Ning,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pp. 7~23.

중국 외교정책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국의 국익에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 선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 규약에 의하면, 당 중앙이 대내외 정책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구성원이 350명 정도로 규모가 크고, 회의를 매년 1~2회 밖에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정치국(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를 통해 추인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국(상무위원회) 구성원들 다수가 외교안보문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내에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전문 회의체를 두고 있다. 중앙 외사영도소조가 그것이다. 2003년부터는 국가안전영도소조라는 명칭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다.²⁵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2003년 이래 후진타오 총서기와 차기 총서기로 내정된 시진핑이 조장과 부조장을 맡고 있고, 외교담당 국무위원, 중앙 선전부장, 공안부장, 국가안전부장, 국방부장, 외교부장, 상무부장 등 중국의 외교안보 최고책임자 대부분이 소조원으로 참여하고 있다.²⁶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전문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중앙 외사영도소조의 사무기구는 중앙 외사판공실이며, 여기에

²⁵ 宮力·門洪華·孫東方, “中國外交決策機制變遷研究,” 『世界經濟與政治』, 2009年 第11期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2009), pp. 52~54.

²⁶ 2012년 10월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영도소조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조장은 후진타오 총서기, 부조장은 시진핑 정치국상무위원 및 국가 부주석이며, 조원은 류윈산 선전부장, 량광례 국방부장, 멩젠주 공안부장, 다이빙귀 국무위원, 랴오후이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양제츠 외교부장, 왕이 대만판공실 주임, 차오중화이 중앙기율위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왕첸 중앙 대외선전판공실 주임, 경후이창 국가안전부장, 천더밍 상무부장, 리하이핑 국무원 교포판공실 주임, 마샤오텐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추웬핑, 두치원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이다. <<http://baike.baidu.com/view/1799376.html>> (검색일 2012.10.2).

서 중앙 외사영도소조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작성·보고하기 때문에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 중앙 외사영도소조에서 핵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외교정책 결정 초안을 놓고,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다루는 최고 회의체로는 중앙 대만영도소조가 있고, 대외경제문제를 관장하는 회의체로 중앙 재경영도소조(財經領導小組)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 외사영도소조와 마찬가지로 중앙 대만영도소조 사무기구로 중앙 대만판공실이 있고, 대외경제문제에 관한 당 중앙 사무기구로는 재경판공실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 대만영도소조 조장 역시 중국 당·정·군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가 맡고 있고, 중앙 재경영도소조 조장은 통상적으로 국무원 총리가 담당해왔다. 대만문제와 대외경제 관계 관련 주요 정책들을 이들 2개 회의체에서 조정·총괄하여 정치국에서 최종 결정 짓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공산당 중앙이 결정하지만, 정책집행은 외교부·상무부·국방부·문화부 등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중국의 국력이 급상승하고 대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 중앙에서 결정된 외교정책을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집행하여 국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활동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교부가 더 이상 중국 외교를 독점적으로 집행하는 시대는 끝났다. 특히 중국이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경제 외교가 중시되고 있는데, 상무부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부서다. 2001년 중국이 15여 년 동안의 지루한 협상을 거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는데, 1986년 이후부터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과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 과정을 주도한 부서도 바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상무부 전신)였다. 서방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은 타 공산당 집권국과의 관계(黨際關係)를 전

문적으로 다루는 중앙 대외연락부가 있다. 과거 냉전시기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위력을 떨쳤던 시기와 달리 현재 중앙 대외연락부 업무와 위상은 크게 감소·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의 주요 정책이 공산당 중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앙 대외연락부는 여전히 중국의 외교 정책 집행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적인 외교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문화 외교와 인문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국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전 세계에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포럼 외교와 스포츠 외교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부, 교육부, 국가체육위원회 그리고 신화사 등 언론 기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외교 추진체계는 점차 제도화, 합리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더 이상 당 중앙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시대는 종료되었다. 대외 무역 권한과 같은 영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대형 국유기업들과 국제관계를 연구·강의하는 전문가들도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미국 프로농구팀에서 활동했던 야오밍(姚明)과 육상선수 류샹(劉祥) 등 개인들도 국제사회에 중국의 호감을 확산시키는 전령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와 같은 정보 수단 발전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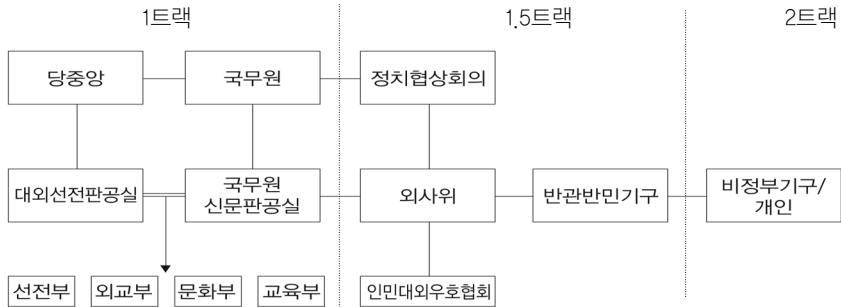
²⁷ 王存剛, “當今中國的外交政策: 誰在制定? 誰在影響?,” pp. 1~18; 張清敏, “社會變遷背景下的中國外交決策評析,” 『中國外交』, 2006年 第6期 (中國人民大學, 2006), pp. 25~34; 孫哲, “中國外交思想庫,” 『中國外交』, 2004年 第11期 (中國人民大學, 2004), pp. 57~62;

나. 중국 공공외교 추진체계

(1) 주요 조직 및 기구

중국이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수용·추진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당·정부 내 공공외교 추진체계는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산당 중앙 대외선전판공실(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국의 공공외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외교에 대한 각 기관별 업무 영역이 중첩되고 공공외교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²⁸

〈그림 II-1〉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중국의 대내외정책 추진체계를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선전판공실이 중국 정부의 공공외교 추진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대외선전판공실은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동일한 기구이기도 하다. 1991년 1월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왕천(王晨)이 주임을 맡고 있다. 당 중앙의 지휘와 감독 아래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대내외 홍보 및 보도 지침을

宮力·門洪華·孫東方, “中國外交決策機制變遷研究,” pp. 52~54.

²⁸ 베이징에서 자오커진 중국 칭화대학 교수와의 인터뷰, 2012.8.9.

마련하여 하달하며, 공공외교 추진 유관 부처를 지휘한다. 당 중앙선전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등 당과 정부의 공공외교 담당부처 및 신화사, 인민일보 및 CCTV 등 언론매체도 중앙 대외선전판공실(국무원 신문판공실) 관할 하에 있다. 외교부 신문사 공공외교판공실, 문화부 대외 문화연락국, 교육부 국제합작교류사 등 공공외교 실무 부서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 방침을 외부에 알리고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교부 공공외교판공실이 중국 공공외교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2004년 외교부 내에 공공외교 전담부서로 처음 출범했을 때에는 공중외교처 이름을 사용했다. 당시에는 중국의 공공외교가 외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대내 국민들을 상대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공공외교처로 개칭한 뒤, 2009년에는 중국 외교부의 공공외교 담당부서를 공공외교판공실로 격상하여 설치했다. 2010년에는 중국 정부의 공공외교정책 추진 및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외교부 내에 전직 대사들과 전문 학자들로 조직된 공공외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공외교도 외교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의 공공외교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부와 교육부 및 당·정 언론 매체들도 중국 정부 부문의 중요한 공공외교 조직이다. 문화부는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주최하고 있다. ‘중국문화 알기’ 행사(感知中國)와 같은 대형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중국 고대문화와 대중문화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대외문화연락국이 중국과 세계 각국과의 문화 교류 활동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공관에 문화처를 개설하여 문화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도 해외 공관에 교육

처를 설치하여, 해외 주재 중국학생을 관리하고 해외 교육기관에 중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등 교육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중국은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을 설치하여 중국어를 해외에 확산시키고, 중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04년 제1호 공자학원을 서울에 설치한 이래 2011년 말 현재 아시아, 유럽, 북미 및 아프리카 등 105개 국가와 지역에 358개의 공자학원과 500개의 공자학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미국 내에 81개의 공자학원과 299개의 공자학당이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의 공공외교에서 미국이 점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온라인 공자학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46개 언어로 100개 국가에 연결되어 있다. 공자학원은 교육부 내 국가 대외 중국어 교육 영도소조 관공실(漢辦)이 관장하고 있으며, 본부는 베이징에 두고 있다. 공자학원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대학과 연구기관이 외국 대학·연구기관과 자매관계를 결성하고 한판(漢辦)이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 자매학교 없이 공자학원을 해외 대학에 개설하는 경우이다. 셋째, 대학 밖에 설치된 공자학원이다.²⁹

그러나 공공외교는 과도하게 정부가 주도해서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정치협상회의와 같은 다양한 지역(56개 민족대표, 홍콩·마카오·대만 동포 등), 계층(공산주의 청년단, 노동조합 등), 분야(여성연합회, 상공연합회, 과학기술연합회, 대만연합회, 화교연합회 등)의 전문가들과 엘리트층을 포괄하고 있는 자문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중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³⁰ 실제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의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²⁹ 이희옥, “중국공공외교의 확산: 체계와 목표,” pp. 373~375; 沈庶英, “孔子学院建设的若干思考——以中华文化走出去为视角,” 『中国高教研究』, 2012년 第5期 (中国高等教育学会, 2012), pp. 89~91.

³⁰ 檀有志, “公共外交中的國家形象建構,” 『現代國際關係』, 2012년 第3期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所, 2012), p. 59.

고취시키고 중국위협론을 해소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애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와 정부의 조치와 행동은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국 국민들에게 쉽게 호소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때로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중국 공공외교를 반관반민 형식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조직은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외사위원회다.³¹ 전국정협 외사위원회는 상설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의 민간외교 주관 창구인 인민대외우호협회를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으로 있는 자오치정(趙啓正)은 외교부가 아니라 전국정협 외사위원회가 중국의 공공외교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³²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을 역임한 자오치정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것도 중국의 공공외교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반관반민 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개인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에 참여하는 반관반민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있다. 전국정협 외사위원회 산하 인민대외우호협회 이외에 국제우호연락회(외교부산하),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민정부 산하) 그리고 중국개혁개방논단(중앙당교 산하) 등도 1.5트랙 형태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다.³³

중국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기구도 존재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이 공공외

³¹ 현재 전국정협 외사위원회에는 공공외교, 국제관계, 대외경제 등 3개의 소조(small group)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공공외교 부서가 핵심 기능을 맡고 있다. 자오치정, 『중국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가』, p. 47.

³² 위의 책, pp. 46~47.

³³ 특히 중앙당교 산하 중국개혁개방논단은 2005년 이래 한국과 1.5트랙 형태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여 한·중 간 정치외교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9년에 출범한 GBD 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이 그 대표적인 기관이다. 마전쉬엔(馬振軒)이 집행회장 신분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일부 전임 외교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조직은 “공영, 상호이해, 존중” 원칙 아래 민간 교류를 통해 중국과 세계와의 모순을 해결하고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⁴ 각종 국제문화교류, 포럼, 경축 활동을 개최하여 중국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호감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기업들이 해외투자 시 직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외국 투자 유치기관과 투자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도 기여하고 있다.

(2) 행위자

중국이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는 당과 정부 내의 대외관계 담당자들이며, 이외에 비정부기구와 민간단체, 대학, 연구기관, 언론매체, 기업 그리고 종교단체의 지도자 및 기타 영향력이 있는 개인들도 중국에 대한 외국의 인식을 개선시켜 중국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보일 경우 기대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외교는 정부의 인사보다는 비정부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해외 순방 시 중국의 실상을 알리고 상대국 국민의 대중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덩샤오핑은 1979년 미국 방문 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미국 국민들 앞에 나타나 친근감을 보여 주고자 했으며,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시를 사용하여 중·미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³⁴ 베이징에서 마전쉬엔 집행회장과와의 내부 간담회 발언, 2012.8.10.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하고, 2010년 원자바오 총리가 서울 방문 시 서울 시민들과 배드민턴을 치면서 환담을 가진 것도 한국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 선전 및 이론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장춘(李長春)과 통일전선부장과 전국정협 부주석으로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 부주석을 역임한 국무위원 류연동(劉延東), 중국의 공공외교 실무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당 중앙선전판공실(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주임 왕천(王晨) 등도 중국 정부의 공공외교를 집행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들이다. 아울러 전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며 현재 전국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으로 있는 자오치정(趙啓正)은 중국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공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중 있는 인사이며, 베이징-도쿄 포럼 등 1.5트랙 형태의 공공외교를 총괄하는 등 중국의 핵심 공공외교 활동가이다. 외교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리자오싱(李肇星) 역시 중국 내 17개 지역에 지부를 거느린 중국국제우호연합회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중국과 외국 국민 간 접촉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내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기구로 신문사 내에 공공외교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외교부 신문사 사장(국장) 친강(秦剛)과 홍레이(洪磊)를 비롯한 4명의 부사장과 공공외교판공실 주임 웨이신(魏欣)이 중국 외교부 내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0년 8월 창설된 외교부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우원중(周文重), 천지엔(陳健), 우젠민(吳建民) 등 전직 고위급 외교관과 권위 있는 학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중국 외교부의 공공외교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내에서 이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자문위원들의 발언과 제안은 중국 외교부의 공공외교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전임외교관들로 구성된 전임외교관연의회를 이끌고 있

는 지페이딩(吉佩定) 회장도 일정 부분 중국 외교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과 정부 직속기관으로서 대내외 홍보임무를 수행하는 인민일보, 신화사,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의 책임자들도 당 중앙선전판공실과 국무원신문판공실의 지시와 감독 하에, 해외에 중국을 홍보하고 중국에 대한 해외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장옌농(張研農) 인민일보 사장, 텐충밍(田聰明) 신화사 사장, 리충준(李從軍) 중국중앙텔레비전 사장 등은 장관급 인사로서 외국 언론매체와의 교류 및 이들 언론매체의 대외 보도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부세계의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민일보 자매지로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즈(Global Times)는 중국 내 애국주의 정서를 외국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강대국 국민들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이들 언론 매체들이 해외에 설치한 지사에 파견된 특파원들도 해외 현장에서 다양한 접촉망을 통해 중국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비정부기구의 성격을 띤 공공외교 수행 단체를 두고 있다. 중국인민외교학회(회장 양원창, 楊文昌), 중국평화통일촉진회와 한·중우호협회(회장 뤼하오차이, 羅豪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회장 리샤오린, 李小林), 차하얼 학회(회장 한팡밍, 韓方明)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공공외교와 관련된 정부, 연구 기관, 기업, 사회단체 간 소통 채널을 형성하여 중국의 공공외교에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증액함에 따라, 중국 내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공공외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외교 이론을 정립하고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실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당교 산하 개혁개방논단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공산당이 하기 곤란한 외국의

I

II

III

IV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학술 포럼과 자문 활동을 통해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중국의 대내외 정책 방침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여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후진타오에게 외교 안보문제 자문을 했던 정비젠(鄭必堅)이 이사장직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리징텐(李景田)이 이사장으로서 개혁개방논단을 이끌고 있다. 이외에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 사회과학원 유관 연구소,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및 베이징외국어대학교와 칭화대학 공공외교 연구중심 그리고 차하얼학회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추이리루(崔立如), 지즈예(季志業), 취싱(曲星), 자오커진(趙可金) 등 이들 연구기관과 학교(학회)의 책임자들도 중국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 역시 서방 국가들처럼 각계 민간 전문가들과 스포츠스타 및 연예인들도 중요한 공공외교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여 외국인들과 접촉한 많은 중국인들도 국제사회의 대중국 이미지를 호전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며, 영화배우 청룡(成龍)과 스포츠 스타 야오밍(姚明)과 같이 유명 인사들을 내세워 중국의 밝은 면을 알리려 하고 있다.

(3) 자원과 수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중국에게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데 활용하는 중요한 자원으로는 발전 모델과 중국 문화 및 중국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활용하는 최대 자산 중의 하나는 성공적인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채택 이후 30여년 기간 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10%에 가까운 경제발전을 성취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앞다투어 붕괴되어가는 파고(蘇東波) 속에서도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 발전과 빈곤퇴치에도 크게 기여했다.³⁵ 이러한 중국의 발전 모델은 특히 정치 민주화 없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2008년 뉴욕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과 서유럽과 같은 고도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보다 중국과 같은 국가 통제하의 경제체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하고 있다.

중국이 가진 경제력과 현금 동원 능력도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이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와 경제·문화활동을 빈번하게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세계 2대 경제국이며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처럼 낙후한 국가의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중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들과 미얀마와 캄보디아, 아프리카 빈국에 대해 부채를 탕감해 주고 무상원조와 저리 차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도 중국이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의 경우, 중국은 순수 공공외교 예산으로 450억 인민폐를 책정하여 집행했다.³⁶ 이로써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중국 홍보 광고물을 게재하고, 6개나 되는 CCTV 채널을 외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송출하며, 신화사 홈페이지를

³⁵ 胡鞍鋼, “對中國之路的初步認識,” 門洪華 主編, 『中國:軟實力的方略』(杭州:浙江人民出版社, 2007), pp. 137~140.

³⁶ 王之綱, “公共外交:中國準備好了么?,” <<http://www.ftchinese.com/story/001030823?page=3>> (검색일: 2012.10.15).

7개의 외국어로 운영하는 등 해외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하는 또 다른 자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 학습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해외에 중국어를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자학원과 공자학당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면, 이들이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중국어 학습 열기는 중국이 공공외교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고대 문화와 무술 및 중국 요리도 중국을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평화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데에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종이, 화약, 나침반 등 인류 최대 발명품을 만들어낸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고, 중국 무술과 음식을 해외에 소개하여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친근감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공자를 찬양하고,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유가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무력보다는 국제평화를 중시하는 국가임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공공외교 자원을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국가 목표 실현에 활용하고 있다. 먼저 언론 매체를 통한 공공외교다. 개혁·개방기 이전에는 중국의 대외 언론 홍보 활동이 라디오 방송 송출과 소수의 외국어 잡지 발행 등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위성TV, 국제방송, 인터넷, 홍보책자 발행, 국제 문화 활동 개최 및 공자학원 개설 등을 통해서도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2개의 CCTV 채널 중 CCTV4 중국어 방송과 CCTV9 영어 방송 등 6개 채널을 해외 대중을 겨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국제방송(中國國際廣播電臺)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38개의 외국어와 중국어로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을 소개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앙방송 등 중국의 유수의 언론사들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많은 외국인과 재외 중국인들이 중국 소식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 언론사 기자들과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전세계에 특파원으로 파견하여 해외 정보 수집과 정부정책 홍보활동 등 공공외교 역량으로 활용하고 있다.³⁷

다음으로 현재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공공외교 수단은 공자학원이다. 중국 문화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 서울에 제1호 공자학원을 개설한 뒤, 현재 103개 국가에 350개의 공자학원과 430개가 넘는 공자학당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주관 하에 문화부와 상무부 및 신문출판총서 등 12개 국가 기구가 참여하여 전세계에 중국어 교육, 중국 요리, 중국 고전문화를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을 더욱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대변인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의 진정한 모습과 실상을 세계에 이해시키고 전파하고 있다. 중국은 1991년 이래 국방백서, 인권백서, 외교백서, 대외무역백서, 기후변화백서 및 평화발전백서 등 수많은 정부 백서를 발간하여,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³⁸ 또한

³⁷ 중국의 당·정기관 언론인들은 해외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때 외교관에 준하는 신분상의 특혜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워싱턴 주재 인민일보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라이왕(席來旺)은 과거 중국현대국제관계소에서 중국 외교전략을 연구했던 학자였다.

³⁸ 중국 정부가 발간한 백서는 <http://www.gov.cn/zwgk/2005-06/02/content_3618.html> (검색일: 2012.6.29)을 참조.

중국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 중앙 정부 내에 신문대변인을 두고 있으며, 각급 지방 정부에까지도 대변인을 임명하여 대내외에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에 걸쳐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국제 현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중국어를 통해 대내외에 설명함으로써, 대외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여론을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도하려 하고 있다.³⁹

중국은 또한 대형 국제 대회 개최 및 각종 형태의 포럼을 주최하여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세계부녀자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녀평등정책을 구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2002년 이래 중국은 하이난섬에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정·재계 지도자 및 학계 대표들을 초대하여 ‘보아오포럼’을 개최하고 아시아 각국 간 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아오포럼은 비정부·비영리성의 국제기구로서 현재 주미 중국 대사를 역임한 저우원중(周文重)이 보아오포럼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이래 다롄(大連)과 텐진(天津)을 돌아가면서 매년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하계 다보스포럼도 전 세계 유수의 전도유망한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중국 기업인과 해외 기업인 간 접촉·협력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세계미디어정상회의,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⁴⁰ 2006년 11월에는 아프리카 48개 국가의 정상들을 베이징에 초청하여

³⁹ 吴旻, “中国话语的议程设置效果研究——以中国外交部新闻发言人为例,” 『世界经济与政治』, 2011年 第2期 (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2011), pp. 18~41, pp. 158~159.

⁴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는 80여 개 국가의 정상이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미국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부시도 참석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참석한 것은 미국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아프리카와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지금까지 어떤 강대국에서도 아프리카 50여 개 국가 정상들을 한꺼번에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한 사례가 없다.

대외원조 공여 활동과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도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공공외교 수단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영도자 지위를 자처했던 1960년대 이래 중국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철도·도로 건설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노동자들과 기술자 및 구조대원들이 제3세계에 파견되어 중국의 외교활동 공간을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중국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정치·사회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 제공시 특별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으므로써 아프리카, 동남아 및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로부터 매력 있는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⁴¹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수력발전소 건설과 도로 및 학교·의료보건 시설을 건설해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해적 퇴치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도로·교량 건설, 지뢰 등 미 폭발물 제거 작업, 물자 운송 및 진료를 위해 17,39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⁴²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⁴¹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北京: 人民出版社, 2011), pp. 2~5; 신종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제15권 1호 (세종연구소, 2009), pp. 33~59; Yong Nam Cho and Jong Ho Jeong, “China’s Soft Power: Discussions, Resources, and Prospects,” *Asian Survey*, Vol. 48, No. 3 (2008), pp. 453~472.

⁴²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2010年中國的國防,” <<http://www.gov.cn/jrzq/>>

중국에 대한 우호적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의 학생들과 여론 선도자들을 중국에 유치하고 있다. 현재 190여 개 국가로부터 30만 명에 이르는 유학생을 중국 전역의 여러 대학에 유치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들 중 2만 명이 넘는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베이징외국어대학, 외교학원 등 중국의 저명 대학에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젊은 학생들과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장학금을 주고 교육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의 대중 우호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인민일보와 신화사 등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세계 각지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중국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위협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공공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에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은 문화교류를 통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홍보하여 중국의 국제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당 중앙선전부의 역할이 이러한 취지에 걸맞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2009년 7월 재외공관장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공공외교와 인문외교를 중국 외교전략 방침으로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외교부 공공외교처를 공공외교관공실로 격상시켰으며, 주요국 대사직을 역임한 외교관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자문위원회도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다.⁴³ 201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와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이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 천명되었다. 아울러 ‘12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서도 공공외교 강화를 중국의 주요 국가 정책 업무로 규정

2011-03/31/content_1835289.html> (검색일: 2012.6.28).

⁴³ 제11차 주외사절회의에서의 후진타오 주석의 발언, 2009.7.17;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政策規劃司 編, 『中國外交, 2011年版』(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1), p. 59.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외교는 향후 중국 외교에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력이 증강되면서 중국은 공공외교 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하여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등 공공외교의 내용과 형식이 풍부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사례연구: 중국의 대대만 공공외교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개 성(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정책을 대외정책으로 보지 않고 대내정책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국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외교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천수이볜(陳水扁)이 주장한대로 중국과 대만은 일종의 ‘특수한 국가 대 국가’(一邊一國)의 관계로 볼 수도 있다.⁴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 목적으로 대만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편의상 대만에 대한 공공외교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 대대만 공공외교 추진 조직과 기구

중국은 대만 문제의 해결을 경제발전과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과 함께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을 정도로 대만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당과 정부 내에 대만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중국의 대대만 (외교)정책 결정·추진과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

⁴⁴ “評論：危險的挑釁——評陳水扁的分裂言論,” <<http://www.peopledaily.com.cn/GB/guandian/26/20020806/793438.html>> (검색일: 2002.8.7).

구는 당 중앙 대만영도소조다. 이는 상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대만 문제와 관련된 최고 지도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모여 중·대만 간 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중앙 대만영도소조의 일상 업무처리 기관으로 대만사무관공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왕이(王毅)가 관공실 주임을 맡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대만영도소조 조장, 전국정협 주석 자칭린(賈慶林)이 부주석을 맡고 있고, 다이빙궈(戴秉國)가 비서장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소조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로는 중앙관공청 주임 리잔수(栗戰書), 중국군 부총참모장 마샤오텐(馬曉天), 통일전선부장 링지화(令計劃), 국가안전부장 경후이창(耿會強), 상무부장 천더밍(陳德銘), 대만사무관공실주임 왕이, 해협회장 천윈린(陳雲林) 등이다.⁴⁵

당 중앙이 결정한 대만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 기관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중앙 대만사무관공실)이다. 대만사무관공실은 중앙 대만영도소조의 사무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당 중앙과 국무원이 확정한 대만 정책 방향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원 각 부서와 각 지방 정부의 대만 관련 업무를 조정·지도·관리하고, 양안 간 ‘3통’ 업무, 즉 통우·통항·통상업무를 관장하고, 대만에 대한 선전·홍보업무와 교육업무를 관할하는 등 대만 관련 모든 업무를 지도·관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⁴⁶

중앙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도 대만 당국과 주민에 대한 포섭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중앙 당기관이다. 통전부 3국이 대만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기능하고 있다. 대만 주민이 중국 대륙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원하고 대만 내 주민과 단체들에 대한 선전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⁴⁵ 游智偉·陳政一, “中共對臺政策之理性與組織過程分析,” 『中國大陸研究』, 第54卷 第4期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2011), pp. 72~73. 최근 중앙 관공청 주임에 리잔수가 임명되고, 통전부장에는 링지화가 선임되었다.

⁴⁶ “中共中央台办, 国务院台办主要職責,” <http://www.gwytb.gov.cn/gtb/201101/t20110109_1685185.html> (검색일: 2012.10.4).

사단법인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는 반관반민 형태로 1991년 12월 설립된 기구로서, 중·대만 간 교류를 촉진하여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해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첫째, 대만 민간 단체와 주민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국과 대만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해상 밀수, 납치, 조업 분쟁 등 중국과 대만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셋째, 대만의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중국에 투자, 무역거래, 학술교류를 필요로 할 경우,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과 투자보장합의서 채택 협상을 주도했다. 중국의 유관 기관과 단체가 대만과 문화, 학술, 체육 등의 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할 때, 해협회의 협조와 자문을 받고 있다. 현재 해협회 회장직은 전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 천원린이 맡고 있다.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민간기구로는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전국대련)가 있는데, 이는 중국 내 대표적인 대만동포 단체이다. 중국내 대만동포의 단결을 도모하고 대만과 홍콩 및 마카오 그리고 재외 대만동포 간의 결속을 통해, 중국의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는 티벳 이외의 모든 성(省)급 지방 정부와 대만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대만동포연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대만 동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공공외교를 직접 추진하는 기능을 가진 전국대련 조직으로 대만동포사무부, 연락부, 문화선전부가 있다. 대만동포사무부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대만 동포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락부는 대만 주민, 해외 대만 동포 및 단체를 연결시키고 접대하며,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 동포들에게 협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만과 해외 대만동포의 중국 내 친지 방문 우호 행사도 거행한다. 문화선전

부는 중국과 대만 간 문화 교류를 지원하며, 대만에 대한 언론 보도와 선전·교육 업무 및 중국 내에서 공부하는 대만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전국대련은 1983년 이래 태성(台聲)잡지를 발행하여, 대만해협 정세를 평가하고 대만 동포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중국평화통일촉진회가 결성되었다. 중국 내외의 각계 인사를 규합하여, 대만해협 양안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평화통일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統一論壇』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중국과 대만에 통일 여론을 고취시키고 양안 간 교류 협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평화통일촉진회에는 전국정협과 전국인대 부위원장, 전국공상련 명예주석 및 8개의 민주당파 지도자들 모두가 회장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거의 모든 주요 단체들을 망라하는 단체이다.

나. 대대만 공공외교 추진 목표와 방식

1970년대까지 중국은 대만에 대해 포격을 가했고, 유엔에서 대만을 축출하기 위해 외교 공세를 강화해 왔다. 이로써 대만주민들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다. 또한 강압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고도의 계획경제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중국은 정치적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였기 때문에, 대만 주민들은 중국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대만을 비롯한 화교 자본의 중국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대한 포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만 정책을 전환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79년 1월 중국은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灣同胞書)”을 발표하여, 대만 문제를 평화적 방식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중국과 대만 주민 간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 교류

를 추진하자고 제의했다.⁴⁷ 이후 중국은 대만에게 국공합작과 ‘3통,’ ‘4류’를 제안하여, 중·대만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여 ‘일국 양제’ 방식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호소했다. 현재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직접 교역, 통신 교류, 직항이 성사되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되었으며, 2010년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가 체결되어 경제적으로 긴밀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 대만 정부가 중국의 ‘3통,’ ‘4류’ 제안을 수용하여, 중·대만 간에 실질적인 통합이 추진된 데에는 1979년 이후 대만 주민과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공공외교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대만 주민과 해외 거주 대만 동포들에 대해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류·접촉 증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동질감과 우호적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통일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에 있다. 평화통일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인적 교류의 증대가 중국에 대한 대만인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는 대만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만 기업인들의 대중국 진출에 각종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 주었으며, 중국 시장을 대만에게 대폭 개방했다. “하나의 중국에는 합의하되,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은 각자 한다”는 1992년 합의(92共識) 정신 아래 중국은 대만 기업인과 대만인에 대해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대만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높은 기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최종 목표는 양안 간 분단의 장벽을 해소하고 신뢰를 증진시켜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이 양안 간 교류협력 활성화 유도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견지하고

47 『人民日報』, 1979년 1월 1일.

있는 것은 바로 ‘이민촉관’(以民促官) 정책이다. 대만 당국이 중국과의 정치 교류와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은 먼저 양안 국민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에 대한 대만 주민의 호감도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전개했다. 대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중국을 방문하여 친지를 만나도록 하고, 중국에 투자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했다. 현재 중국과 대만 간에는 분단의 장벽이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 주민들을 움직여 대만 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이민촉관’ 정책은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인적 및 경제·문화적 교류를 최대한 자유화함으로써, 양안 간 상호의존도를 심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대만이 중국과의 정치협상을 철저히 거부하는 상태에서도 중국은 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인적·경제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허용했다. 1996년 이후 리덩후(李登輝)이 정부와 2000년 이후 천수이벤(陳水扁) 정부가 대중국 투자제한(戒急用忍) 정책과 대만에서 중국 지우기(去中國)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저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은 인내하면서 대만 당국과 대만 주민에 대해 분리대응 정책을 채택했다. 대만 내에서 분리 독립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과 대만 간 정치관계는 악화되었지만, 중국은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과 대만 주민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우대조치를 취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또한 중국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대만이 국부로 추앙해 온 쑨원(孫文)을 중국이 부정하지 않고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마오쩌둥 집권 시기까지 중국은 삼민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지만, 개혁·개방정책 채택이후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차원에서 민족, 민생, 민권 등 삼민주의

사상을 존중하고,⁴⁸ 1996년에는 난징에 쑨원공원을 건립하여 중국의 근대화에 공헌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다분히 대만인과 중국인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으며, 따라서 쑨원과 삼민주의는 중국과 대만을 연결해주는 사상적 기초로 활용되었다.

다. 대대만 공공외교 수단

중국에 대한 대만인의 우호적 인식을 유도하고 양안 간 동질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조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동포투자장려규정과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 법규를 마련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대만 자본을 특별히 보호·우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시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대만 투자기업이 집중된 지역에 대만계 자본이 병원, 학교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과 광둥성 지역에는 많은 대만 자본이 진출해 있어, 해당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만과 이들 지역은 이미 하나의 경제지역으로 통합되어 있다.

대만 상품에 대해서도 중국은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만의 대중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만 상품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40% 가까이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대만에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크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만이 3,3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중국은 대만 경제가 발전하는

⁴⁸ 賈乾初, “試論中國共產黨人對三民主義的評價與超越,” 『燕山大學學報』第10卷 第4期(燕山大学, 2009), pp. 83~87.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대만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우대조치는 중국에 대한 대만 재계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만의 경제계 인사들은 대만 정부가 중국에 대해 경직된 정책을 전환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012년 초 대만 총통선거 시에는 양안 간 교류협력 확대를 바라는 중국 투자 대만 경제인들이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馬英九)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일시 귀국하여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다.

둘째, 대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중국과 대만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투자 보장에 합의했는데, 이 협정은 대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대만의 많은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 대해 조기수확(early harvest)제도를 규정하여 대만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보도록 허용하였다.⁴⁹ 이외에도 중국은 대만 독립 정서가 강한 대만 남부 지역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안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대만산 과일과 채소에 대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단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대만의 민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의 친지를 방문하고 고향을 찾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현재 매년 수백만 명의 대만 주민이 중국을 찾고 있으며, 대만 동포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많은 대만 학생들이 중국 내 대학에서 중국 학생과 동일한 학비 지불과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통·숙소·관광지 입장권 구매 등 생활상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⁵⁰ 일반 대만동포들도 호텔

⁴⁹ 『人民日報』, 2010년 6월 30일.

⁵⁰ 2004년까지 중국 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한 대만 학생이 8,700명에 달했으며, 1996년부터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중국 대륙에서 공부하는 대만·홍콩·마카오 학생에게 편리를

등 중국 내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를 받고 있고 관광지 입장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넷째, 대만에 대해 적극적인 언론 홍보 수단을 통해 대만의 분열지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민의 중국 방문을 자유화함으로써 많은 대만인들이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만 주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국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접한다. 따라서 언론 매체 교류는 양안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1987년 대만 언론 매체의 중국 방문과 취재 활동을 허용하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대만 기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1991년에는 중국 신화사와 중국 신문사 기자가 처음으로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의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취재 활동을 벌였다. 2004년까지 중국을 방문한 대만 기자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취재차 대만을 방문한 중국 언론계 인사는 500명을 초과했다. 현재 대만의 거의 모든 언론사가 중국에 기자를 파견하여 취재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사, CCTV 및 중국인민라디오방송국이 대만에 상주기자를 파견하여 대만 소식을 중국에 전하고 있으며, 대만 주민에 대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다루는 전문 채널 CCTV4를 설치하여 대만 동포를 겨냥하여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매체들은 현재 대만의 언론 매체와 뉴스 교환, 대리 취재, 합동 취재 및 프로그램 교환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문화·학술 토론회 개최 및 대형 문예공연 활동을 통해 양안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⁵¹

다섯째, 국제무대에서 대만인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제공하기 위한 통지'를 공포하여 대만 학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왔다. 國務院台灣事務辦公室, 『中國台灣問題外事人員讀本』(北京:九州出版社, 2006), p. 69.

⁵¹ 위의 책, pp. 71~73.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대만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제무대에서 대만 정부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만 동포의 관심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해외주재 중국 공관의 주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⁵² 실제로 해외에서 대만인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중국 공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100여 명의 대만 노무자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을 중국 공관이 도와주었으며, 1997년 인도네시아에서 안전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만 여행객 150명은 중국 대사관의 교섭으로 대만에 안전하게 귀국했다. 이러한 사실이 대만에 보도된 뒤, 대만 내에서는 중국이 대만 주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조력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⁵³

라. 대대만 공공외교 성과

양안 간에는 연간 수백만 명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2천억 달러에 이르는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과 2012년 투자보호촉진협정 및 세관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중국과 대만은 경제·문화적 영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통합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분리 독립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안 간 비정치적 영역에서 긴밀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대만에 대해 중국이 공공외교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대만 주민과 대만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대만과의 교류에 임했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의 평화통일 공세에

⁵² “胡锦涛:外交要把应对金融危机冲击作为重要任务,” <http://intl.ce.cn/zgysj/200907/21/t20090721_19584448.shtml> (검색일: 2012.10.7).

⁵³ 『自由時報』, 1997년 4월 11일; 國務院台灣事務辦公室, 『中國台灣問題外事人員讀本』, pp. 218~221.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이다. 둘째, 중국 공산당과의 2차례 국공합작에서 철저하게 기만을 당한 경험 때문에,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 협상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따라서 중국은 ‘먼저 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대만 정부에게 중국과 대화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이민촉관’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했다. 셋째, 철저하게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했다. 대만이 분리 독립 여론을 고취하여 중국을 자극하고 위협했을 때에도, 대만 기업인이 중국에 계속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넷째, 조금하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점진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중국은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며, 중화민족 정체성을 고취하는데 주력하고, 정치 대화와 협상은 여건이 조성된 뒤에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⁵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통합이 실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여 년 간 교류와 접촉이 축적됨에 따라, 중국인과 대만 주민 간에는 상호 이해와 친근감이 증진되었다. 양안 간에는 경제·무역·투자·통혼·교육 부문에서는 상당 수준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인의 대만 여행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도 68%가 넘는 대만 주민이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중국인에 대한 대만인의 호감도가 크게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⁵⁵

그러나 정치적 통합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대만 정부와 대만 주민은 중국에 대해 여전히 강한 위협과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통합까지를 목표로 삼는다면,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중국이 대만에 대해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대만의 대기

⁵⁴ 杜力夫, “論兩岸和平協議的三大支柱與階段性進程,” 『中國評論』, 2012年 8月號 (中国评论通讯社, 2012), pp. 4~10.

⁵⁵ 郭震遠, “台灣的兩岸國家認同缺失及其對兩岸關係的影響,” 『中國評論』, 2012年 8月號 (中国评论通讯社, 2012), p. 11.

업과 중간 상인에게 돌아가고 일반 대만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 체제와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한 대만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경계심은 크게 누그러뜨리지 못했다.⁵⁶

최근 대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공외교가 중국이 의도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만 주민의 비율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대만 연합보(聯合報)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밝힌 응답은 69%, 대만인임과 동시에 중국인이라는 응답은 11%, 중국인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1997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만인이라는 응답이 43%, 중국인이라는 응답이 31%였다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대만인들이 점차 중국과의 정치적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⁵⁷

〈표 II-1〉 대만 주민의 자아 정체성

연도	대만인	중국인	대만인인 동시에 중국인
1997	43%	31%	13%
2009	69%	12%	11%

출처: 郭震遠, “台灣의兩岸國家認同缺失及其對兩岸關係的影響,” 『中國評論』, 2012년 8월호 (中国评论通讯社, 2012), p. 11.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공외교 노력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⁵⁶ 湯紹成, “台灣認同問題的吊危,” 『中國評論』, 2012년 6월호 (中国评论通讯社, 2012), p. 43.

⁵⁷ 林紅, “和平發展形勢下台灣民衆的中國意識,” 『中國評論』, 2012년 5월호 (中国评论通讯社, 2012), p. 27.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정치체제의 문제점과 부정부패 및 사회적 혼란에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정치적 자유를 바라는 대만 주민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있으며, 부패했다고 인식되는 중국 정부가 대만인들의 생명과 권익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4. 중국의 공공외교 특성과 평가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도 국제무대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중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자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공공외교가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의 공공외교가 지닌 특성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내에는 아직 공공외교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의 공공외교가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전통 외교 개념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사들 사이에 공공외교에 대해 커다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전통 외교 학파는 외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외교도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외교는 본래 국내 정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기업과 비정부기구도 주요 외교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민간도 공공외교의 중요한 행위자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체계적·통합적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지 못하고, 각 기관과 행위자들이 독자적·비협조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비효율성을 띠고 있다.⁵⁸

⁵⁸ 韓方明, “我国公共外交的五大问题,”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2>

둘째, 중국의 공공외교 활동은 당 중앙과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과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형식상 공산당 중앙대외선전판공실(국무원 신문판공실)의 통제 아래 외교부, 전국정협 외사위, 전국인대 외사위, 교육부, 문화부 등 정부가 중국의 공공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공공외교가 고도의 정치적 의도 하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서방 선진국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비정부기구(NGO)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과 개인도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2012년 5월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파견된 공자학원 중국어 교사들의 비자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던 이유도 중국의 공공외교 활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었다.⁵⁹ 중국의 공공외교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이유 중의 하나다.

셋째, 중국이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공공외교 자산은 발전모델과 고대 문화, 중국 언어 등이다. 중국이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중국문화원과 공자학원 및 공자학당을 찾는 외국인 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발전모델은 서방 선진국과 민주주의 국가에게는 그다지 매력을 주기 어려우며,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후진 국가 그리고 북한과 같은 극소수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넷째, 중국의 공공외교 중점 대상지역과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이다. 이는 중국의 공공외교가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며, 공공외교의 목표가 ‘중국위협론’을 완화하여 중국의 경제

-02/27/content_24740442_2.html> (검색일: 2012.10.15).

⁵⁹ 吴庆才, “美国回应孔子学院事件 称尽量不让任何老师离美,” <<http://news.sohu.com/20120525/n344042779.shtml>> (검색일: 2012.10.16).

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며, ‘중국위협론’이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는 국가 또한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공공외교의 핵심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요한 공공외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⁶⁰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요한 공공외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역이 중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비교적 쉽게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주요 공공외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⁶¹

다섯째, 중국은 자국 국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중외교(公衆外交)를 추진한 다음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를 전개하였다. 중국의 공공외교가 대내적 통합의 기초를 다진 뒤 대외분야로 중심이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는 중국 국민들에게 외교부 청사와 외교사료를 공개하고, 외교부 지도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중국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에 대해 중국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중국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국론분열 현상이 일어날 소지를 차단한 다음, 외국(인)을 겨냥한 공공외교를 추진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공공외교는 별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않고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공외교에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하려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중국은 주변국

⁶⁰ Song Lilei and Wang Yiwei, “Chinese Public Diplomacy toward Europe: Goals, Progress and Challenges,”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1, No. 5 (September/October 2011), pp. 8~16.

⁶¹ 최근 한·중 국민 간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공공외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북한에 가더라도 북한 주민과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자오커진 중국 칭화대학 교수와의 인터뷰, 2012.8.9.

들에 대해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자제하고, 경제력과 문화적 우월성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 대해서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무제한의 시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가능할 수 있는 동인은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방식이 아닌, 후계자 ‘격대지정’(隔代指定)이라는 방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도부의 권력을 승계하는 정치체제 성격상, 결정된 외교정책 방침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권력 구조 성격상 장기간 일관된 목표를 갖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II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입장과 정책⁶²

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내정치 상황, 한반도의 현실, 세계적인 차원의 안보를 고려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 구도 등을 복잡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현대화를 최우선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현재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민족의 통합과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제 환경의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향후 20년을 위대한 중화 민족의 중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판단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한다는 국가 계획을 제시하였다.⁶³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패권 경쟁을 피하고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들은 소위 권력 전이(power transition)나 중국위협론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⁶⁴ 즉 중국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⁶² 이 장은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에서 저자가 집필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pp. 137~156) 부분을 요약·발췌 및 재수정한 것임.

⁶³ 소강(小康)이란 『공자』에 나오는 말로 정치가 안정화되어, 조금씩 부역을 덜어 백성을 편하게 하며, 다소 자선이 생겨 생활에 쪼들리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저자 주).

⁶⁴ 중국위협론에 관한 연구로는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국제정치』, 제18권 2호 여름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pp. 1~26;

인 팽창을 할 것이고, 현재의 국제질서와 체제 균형에서 균열을 발생시키며, 기존 강대국 주도의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 세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중국 역시 중국위협론의 확산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부상(和平崛起), 평화발전(和平發展), 조화세계(和諧世界) 등과 같이 갈등보다는 화합과 평화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천명해 왔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역내의 안정적인 국가 관계,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유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은 쉽게 불식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끊임 없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방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국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해상 영토 분쟁의 중심에 중국이 핵심 주체로 등장하여, 주변 국가들과 빈번한 의견 대립 및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중국위협론에 대해 부정하건 부정하지 않건,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외교 행보에 상당한 위협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최근의 공세적 외교 행보들은 미국에 의해 동아시아 질서가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동맹에 근거한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를 강화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처럼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주요 대상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반도 정책은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하위 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위협론의 배경, 동향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김유리,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통해 본 중국위협론 논의의 재고찰,” 『동아연구』, 제63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2), pp. 49~82를 참조할 것.

⁶⁵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叶自成, “对中国和平发展与国际环境之关系的几点思考,” 『国际政治研究』, 第1期 (北京大學, 2006); 黄仁伟, “國際體系轉型與中國和平發展道路,” 『鄧小平毛澤東理論研究』, 第5期 (上海社会科学院; 邓小平理论研究中心; 毛泽东思想研究中心; 哲学研究所, 2006)를 참조할 것.

그렇다면 중국에게 한반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일단 중국에게 한국은 매우 이중적 의미를 가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중국 경제발전의 모델국가이자, 비중 있는 무역상대국이다. 지리적으로 인접국이며 문화적 동질성의 공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군사·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냉전, 한국전쟁, 한미동맹 등 미국 변수와 북한 변수를 포함하는 부담스런 존재이다. 반면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동맹국이며 전쟁을 같이 수행했던 동지애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위기와 북핵문제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담을 동시에 주는 상대이다.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중국에게 한국, 북한 모두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중요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이자,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와해 혹은 결속력 약화를 위한 포섭 대상이다. 북한은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안보적 수단이자, 자국의 동북 지역 진흥을 위한 잠재적 자원 배후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를 포용하고 싶어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갈등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

두 나라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기 보다는 일방의 편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전개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강화되거나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한반도가 되도록이면 현재의 분열된 상태에서 특별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특히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의 확대 등을 우려해 왔다. 동시에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외세의 개입이 없는 자주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식적 입장은 한반도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이다. 한중수교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고,⁶⁶ 장쩌민(姜澤民) 국가 주석도 국가수반으로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 아래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⁶⁷

특히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평화적 과정과 남북 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래,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신국제질서 건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냉전시기 중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이데올로기적 동질성, 동맹 요인 때문에 북한의 통일정책이나 방안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특히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탈냉전 이후 중국은 도광양晦(韬光养晦)와 유소작위(有所作为)를 외교 행위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했으며, 신안보관(新安全观)을 국제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하는 기본 원칙이자 전략으로 설정했다. 1999년에 공식화된 중국의 신안보관은 상호신뢰·상호이익·평등·협력(互信, 互利, 平等, 协作)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상호 평등한 조건에서 상호 간의 안보 이익을 존중하며, 다자 형식을 통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평화적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⁶⁸

⁶⁶ 『한중수교 공동성명』 1992년 제5조.

⁶⁷ 1995년 11월 17일 장쩌민 주석 방한 연설, <http://www.mofat.go.kr/state/publication/2003/.../612_file>.

⁶⁸ 刘国新, “中国新安全观的形成及实践,” 『思想理论教育导刊』, 第1期 (高等教育出版社, 2006), pp. 63~69.

신안보관에 입각한 가시적인 외교 전략은 협력의 강조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정세에 부응하면서, 한국과 북한 모두와 협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중국은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중수교 당시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모책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또한 냉전시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교차승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남북한을 교차 승인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북한 모두와 상호 협력을 확대시키려는 실용적 외교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일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 현재의 안정이 저해되거나 중국의 동북 지역과 동북아 질서의 현상 균형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냉전 구조, 즉, 대결 구도를 협력 구도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미, 미일 등 양자 동맹체계가 지배하는 동북아에서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 개입의 정도를 완화 또는 중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⁹

중국의 한반도 자주·평화 통일의 강조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외세의 개입에 대한 우려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미국이다.

⁶⁹ 石源华, “六方会谈机制化东北亚安全合作的努力方向,” 『国际观察』, 第2期(上海外国语大学, 2005), pp. 15~20; 李淑云, “信任机制: 构建东北亚区域安全的保障,” 『世界经济与政治』, 第2期(2007), pp. 32~40.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 확대되어, 중국의 견제와 봉쇄로 이어짐을 우려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중국 부상에 대한 견제 그리고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가 강화된다면, 동북아 세력 균형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균형이 무너진 구조 속에서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자국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이다.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은 외세의 개입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상위 차원이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 및 중국 봉쇄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면, 이는 곧 자국 영향력 확대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평화발전론과의 연관성이다. 중국의 평화발전론은 중국의 부상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여타 국가들과 공동이익,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평화로운 부상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이고, 중국 역시 중국 위협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서 견제를 줄이려는 측면이 강하다.⁷⁰ 따라서 중국은 주변부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갈등과 분쟁 해결 역시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이 주장해 온 평화발전론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학 상으로는 줄곧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역시 수사학 상의 구속력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통일과의 연관성이다. 중국 역시 대만과의 통일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

⁷⁰ 한석희,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변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화평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1집 3호 가을호 (신아세아연구소, 2004), pp. 113~134.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는 자국의 통일 문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원만한 통일 사례가 미국과 일본의 개입 및 간섭을 약화시킬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대만 문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연관되어 있고, 미국 무기 수입 등 미중갈등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해결을 강조하는 것 역시 대만 문제에 대한 외세 개입을 반대해 온 맥락과 일치할 뿐 아니라, 연계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입장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방식이나 과정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1국 2제의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중국은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을 반대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을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국력 차이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중국 내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⁷¹ 이들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지지 정책을 재고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한반도 통일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⁷² 이러한 인식은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게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무대에서 경제협력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면에서 전방위적인 상호 교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⁷¹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한국 주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인터뷰, 2012.8.23). 위키리크스는 “중국 고위 관료들이 한반도가 남한 주도로 통일돼야 하며, 이런 입장은 중국의 지도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키리크스』, 2010년 11월 30일.

⁷² 중국 칭화대 추수룡 교수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베이징대 주평 교수 역시 북한 체제는 얼마안가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하는 등 대북한 정책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3일.

반면, 북한은 3대 세습 등 독재체제 고수, 경제위기에 따른 붕괴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원조 부담, 북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위기 제고 등 중국에게는 낯이 부담을 제공하는 골칫거리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부 등 전통적 안보 중시파들은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특히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늘 전략적 의구심을 가져왔다.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전통적 안보론자들은 한국과 정치 협력 확대,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까지 같이 논의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공고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⁷³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중국은 북한 주도의 통일 역시 반대한다. 중국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설령 무력 도발을 통해 통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개입에 따른 무력 충돌의 불가피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지속 성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야기되는 등 자국 국익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

둘째,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점진적인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전제하고 있고,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급진통일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 등의 가능성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중국의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다음으로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종합 국력이

⁷³ 중국인들의 한국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인들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편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2011 한중 국민 상호 인식 조사』 (서울: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2011)를 참조.

성장할 때까지,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내심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진행되더라도 점진적 방식으로 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형태가 중국과 비슷한 1국 2제의 방식이 적용되기를 희망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홍콩과 마카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1국 2제의 방식을 적용하면서, 급진적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실험을 진행해 왔다. 이는 통합대상 지역에 대한 배려의 측면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 독재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였다.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이 북한의 현 체제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통일 방식을 선호할 이유는 별로 없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 및 서방이 경제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중국의 체제변화를 모색했다고, 소위 화평연변 전략에 대해 비판했었다.⁷⁴ 한반도 통일 이후 체제가 한국형 민주주의 체제로 급히 진전된다면, 중국은 자국의 현 체제 유지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선호할 리가 없다.

이왕이면 중국은 통일한국보다는 2개의 한국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통일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면,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으로 다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안보 위협이 증가해서는 안되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지 간에 이익을 창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통일 자체보다는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⁷⁴ 화평연변이란 서방 국가들이 무력의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여, 평화적으로 정권을 붕괴시켜려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반화평연변의 입장과 전략에 관해서는 최관장, “소련 사회주의 해체이후 중국의 반화평연변정책(反和平演變政策)과 한반도,” 『슬라브 연구』, 제8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2), pp. 35~57를 참조.

2.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가.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

중국은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 혹은 평화를 존중하는 발전을 강조하는 ‘평화발전(和平发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공공외교 강화는 소프트파워의 확산을 통하여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대한 재확신, 중국 부상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현재의 국제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이라는 중국 위협론의 시각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사실 중국의 부상은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G2의 지위로 급부상했고, 비록 중국이 평화발전, 조화세계(和諧世界) 건설 등 유화적인 외교 수사를 통해 평화로운 부상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일련의 공세적인 군사·외교적 행태들은 중국의 강대국화 혹은 지역 패권화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대시켰다. 즉,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내세워 온 도광양晦(韬光养晦)의 수세적이고 피동적인 외교 전략이 점차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간혹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국외 언론 매체들의 상당수가 색안경을 끼고 중국에 대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세계 대중들이 중국에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일 간 조어도 분쟁, 남중국해 도서 분쟁, 인권 문제(티베트, 류샤오보 사건) 등에서 중국의 매우 강경한 반응과 대응이 있었고, 이 행태들은 현재진행형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국제사회의 오해를 해소하고 중국

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지, 또한 국내 개혁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의 결과는 중국이 시급히 공공외교를 발전 확산시켜,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확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2009년 외교부 신문사(新聞司) 산하의 공공외교처를 공공외교판공실로 승격시켜 본격적인 공공외교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⁷⁵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중국의 외교는 전통적 차원의 관방 외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영역도 확대되어 언론매체, 싱크탱크, NGO 및 일반 대중도 외교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중국 공공외교의 전방위적 확산을 예고한 바 있다. 후진 타오 국가주석 역시 2009년 외국 주재 대사 회의에서 중국의 외교능력을 고양하여 중국의 이미지 친화력을 높이고 매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외교, 인문외교, 각종 형식의 대외문화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해, 중국의 우수 문화를 전파하라고 독려한 바 있다.⁷⁶

중국 공공외교의 목표를 간략하게 말하면,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국의 발전과 성장을 유익하고 좋은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교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치제도나 국내정책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중국은 경제전환기의 개발도상국이며 국내외적으로 거대한 도전과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정치·경제개혁 중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방법이나 사회 불안에 대해 과도한

⁷⁵ 『新华网』, 2010年 5月 31日.

⁷⁶ 김애경, “중국의 공공외교-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불식을 위한 전략세우기,” (KIEP 중국전문가 포럼, 2010.10.21), <<http://csf.kiep.go.kr>> (검색일: 2012.10.11).

우려를 제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둘째,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로 비쳐지기를 희망한다. 셋째, 중국은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경제적 동반자이자 위협적이지 않은 경제대국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위의 세 가지 이상으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문명국가로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존경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⁷⁷

이러한 중국 공공외교의 목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를 추구해왔고, 향후 지향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에게 한국과 북한은 동시에 중요하다. 한국은 자국의 대표적인 무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요 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해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다. 북한 역시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혈맹의 대상이며, 자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은 양국의 이해를 적당히 조율하는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을 선호하면서, 그 바탕 하에 양국에 대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전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미지 구축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문제로 인한 지역 사회의 전쟁 방지 및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과 북한 양국에 대한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 외교적 효과를

⁷⁷ 이원준, “중국의 외교정책과 공공외교-중국 공공외교의 한계와 도전,”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4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pp. 172~173; 李默, “中国公共外交现状与发展建议,” 『消费导刊·理论广角』, 第5期 (武汉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 2007), p. 202.

거두려고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성장이 주변 국가에게 이익이 되고 책임감 있는 경제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 하에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반도에도 이익이 되며,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및 대북 투자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넷째, 통일 한반도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사전 작업을 고할 것이다. 통일 한반도가 친중국적이면 좋겠지만, 최소한 적대적이거나 적대 세력으로 편승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공공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만일 통일한국이 친미 성향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통일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안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적 영토 회복 움직임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 차단하려 할 수 있다. 중국은 통일 이후 조선족 자치 지역의 분리 독립 확산을 경계하고 있으며, 간도 지역의 고토 회복 운동 등의 부활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고구려사 왜곡 작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역사 문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주장 하는 외교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은 중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주 차원에서 언급했다. 아직까지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공공외교 전략을 구상하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소프트파워와 매력 확산을 중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지역 질서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서, 지역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한반도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공외교를 향후 전략적으로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필요성이 점차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있다. 중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자, 자국의 안보 이익에 유리하게 유도해야하는 설득 대상이다.

I

II

III

IV

그러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과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한중 간 정치·외교 관계가 악화되었고, 역사·문화 분쟁 등으로 인해 양국 대중들의 민족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010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중국이 12.1%로써 일본 (32.6%)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으나, 2012년 매일경제의 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중국(54%)이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 감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⁷⁸

중국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혐한·반한 정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국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현상이다. 한중 간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동북공정 등 역사·문화 분쟁,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 중국의 민족주의 확산, 이명박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합동군사 훈련 등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⁷⁹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반한 정서의 증대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국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해서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적 자주 통일을 지지한다고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⁷⁸ 『매일경제』, 2012년 1월 1일.

⁷⁹ 중국의 대한국 종합 인식에 대해서는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에서 구체적인 분석 제시.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44.6%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이 통일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15.5%로 낮았다. 응답자의 59.1%가 중국이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중국이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특히 최근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다수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은 한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중국은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2%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⁸⁰ 중국에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내 중국위협론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증가하고,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의 흐름에 대해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 공공외교의 필요성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혈맹의 대상이자 안보적으로 전략적 자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핵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로 인해 중국의 주변부 안정이라는 대외 목표를 흔들리게 하는 전략적 부담의 대상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말썽을 부리지 않고 중국의 바람대로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북핵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왔다.

북중관계가 긴밀해지고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북한 일반 대중들의 뿌리 깊은 중국 혐오증은 쉽게 개선되지 않은

⁸⁰ 『서울신문』, 2012년 5월 30일;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2010), pp. 118~135를 참조할 것.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¹ 또한 북한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비호를 받으면서도 중국식 개혁개방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북핵 및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절 협의를 하지 않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지원과 공공외교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책임 대국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외원조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중국 특색의 대외원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대외원조에 있어 수혜국과 상호이익 및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혜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 대국의 면모를 국제사회에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식 개발 모델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 모델은 이미 많은 개도국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모델의 성공을 이해하고 경험을 학습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⁸²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불량국가인 수단·미얀마에 게도 중국 특색의 대외원조 메커니즘을 적용해, 미국 및 서방 국가의 제재 속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⁸³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는 이미 오랜 시간 지속되었으며, 향후에도 중국 특색의 대외원조는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는 주요한 공공외교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중국은 자국의 1국 2제 및 대만과의 양안 관계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을 활용해서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공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⁸¹ 『경향신문』, 2012년 6월 26일; 『아시아 투데이』, 2012년 4월 13일.

⁸² 중국 모델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는 전성홍 외, 『중국모델론』 (서울: 부키, 2008), pp. 27~76를 참조.

⁸³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JPI 정책포럼』, 2010-29 (제주평화연구원, 2010).

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와 주요 내용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요한 목표가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우호적인 협력을 얻어내려는 등거리 외교를 기본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관련 공공외교 역시 현상유지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우선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현재의 현상 유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현상타과 보다는 분단된 한반도를 산정하고 공공외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 이 객관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 구도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확대이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러한 구도의 지속은 중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통일지향보다는 분단 유지 쪽으로 선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중국은 각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공외교를 진행시켜 왔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주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 확대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과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을 주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중국의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동북아에서의 긴장 고조 등의 주요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한국에게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및 중국 견제 전략에 편승하지 말 것을 희망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I

II

III

IV

줄이기 전략을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진행하기만 한다면, 중국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과 역내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을 각인시키면서,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정책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공공외교 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외교 수사와 조직을 동원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왔고, 대북 제재 등에 있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행보를 보여 주기도 했다. 대북 강제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북핵 등 군사적 모험 노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의 국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외교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북아 세력균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및 원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으로서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유지하려는 메시지 전달과 행동을 진행해 왔다. 중국은 북한과 사회주의혁명 등 이데올로기적 동질성·한국전쟁 경험의 공유·우호관계의 역사적 전통성 등을 부각시키면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성 개발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우주 개발의 형평성 논리를 옹호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내정간섭 반대 및 북한 고유의 독자성 및 특수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3대 세습 등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동북아 세력균형과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균형전략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접근은 민간 조직들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중국의 민간 조직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원조 및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문화교류 행사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 강조 및 과학·기술·교육·사회문화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양자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는 내용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래 경제 발전 모델의 제시와 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주요 후원국으로서의 영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정부 조직 체계 및 프로그램

중국은 공공외교에 있어, 정부 주도를 강조해오고 있다.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주체는 정부, 사회 엘리트, 일반 대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주도하고, 사회 엘리트가 증추가 되며, 일반 대중이 기초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⁸⁴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는 특별히 없으며, 중국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체계 틀에서 대한반도 관련 공공외교 및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전진기지로 공자학원이 있지만, 주로 문화외교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공공외교 기구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⁸⁵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한반도와 관련한 기존의 조직들과 한중, 북중관계에 중요한 정부부처와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수행하

⁸⁴ 赵启正, “由民间外交到公共外交,” 『外交评论』, 5月(外交學院, 2009), p. 2.

⁸⁵ 공자학원에 대한 설명은 聂映玉, “孔子学院概述,” 『上海教育科研』, 第3期(华东师范大学教育学系, 2008), pp. 35~39를 참조.

는 정부 체계와 각 행위 주체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1) 공산당 선전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직속 기구로, 공산당의 사상이나 노선의 선전, 교육, 계몽을 담당한다. 중화 인민공화국 내의 신문, 출판물,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고, 각종 법률 업무를 지도하기 때문에, 중국의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⁸⁶ 특히 각종 해외 매체 및 기자들을 접대하고 해외와의 교류 및 정보 제공 업무는 중앙대 외선전관공실(中央对外宣传办公室)이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는 중국의 당국가 체제 특성상 인력 구조가 아래 설명할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국가정보판공실과 거의 일치하며, 중복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무적인 선전 방향은 선전부가 담당한다면, 보다 더 핵심적인 방향 설정에 관여하는 정부 기구는 중앙선전사상공작영도소조(中央宣傳思想工作領導小組)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조는 사실상의 중국 공공외교의 최고 컨트롤타워로 볼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이 조장을 맡고 있다. 이 소조는 당 중앙선전부장을 비롯해 교육·문화 담당 부총리,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국가광전(廣電)총국장(방송·영화 관할), 문화부장,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국정홍보처장 격),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담당 부주임 등 당·정·군 관련 분야의 부총리·장관급 책임자 10여 명을 조원으로 두고 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나 관영 신화통신사의 사장도 소조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선전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⁸⁶ <<http://cpc.people.com.cn/GB/64114/75332>> (검색일: 2012.10.11); 공산당 조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中共中央组织部, 『中国共产党组织工作辞典』(北京: 党建读物出版社, 2009)를 참조할 것.

지시를 내리는지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공공외교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통일 전반에 걸친 외교 방향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기구가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과 대변인 제도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 정부의 대변인실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 주로 중국의 여론 매체를 통해, 세계에 중국의 대내외 정책, 경제 사회 발전 동향·중국의 역사·과학·교육·문화의 발전 상황을 설명하고, 각종 매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기자 회견, 보도 자료, 영상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자들의 중국 취재 및 해외매체들의 중국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⁸⁷ 신문 판공실의 주요 목적이 중국과 세계 각국 간의 소통과 이해·합작과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 세계 평화 유지와 인류의 발전에 건설적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대표적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⁸⁸ 최근에는 감지중국(感知中国) 활동을 강화시켜 중국의 대외선전 및 문화교류 활동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감지중국은 말 그대로 중국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알린다는 의미를 지지고 있다. 이 활동 대상에는 한국과

⁸⁷ 신문판공실을 각 지방 정부 차원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과 교류가 많은 산둥성 인민정부 신문판공실 같은 경우에는 판공실 주도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유학, 여행을 하는 한국 독자 위주의 잡지를 발간하고, 한국 지사를 두고 있기도 하다.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20519>> (검색일: 2012.10.11).

⁸⁸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991년 설립된 이후 상하이 부시장이었던 자오치정(趙啓正)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이 조직의 수장을 맡아 중국 공공외교의 틀을 구축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세계 여론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외교기구를 설립할 것을 지시했고, 자오치정이 재차 당 선전부장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을 겸직하면서 공공외교 조직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이희옥, “중국공공외교의 확산: 체계와 목표,” p. 359.

북한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주로 중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⁸⁹ 중국의 국정과 입장을 알리는 정부백서 및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중국의 경제상황 및 각종 금융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과 북한기업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는 중국의 전반적인 대내외 정책 외에도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민족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어, 한국이나 북한 내의 부정적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발전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통일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대변인 제도(특히 외교부)는 북핵문제 등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⁹⁰ 중국은 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6자회담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를 개선해,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공동으로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 2012년 5월 23일)

⁸⁹ 신문 판공실 주최로 한국과 각종 도서 및 사진전, 경제 및 언론계 고위급 인사 간 논단, 중앙민족가무단 공연, CCTV-KBS 공동 음악회, 신장민족예술단 공연, 소림사 무술 공연 등이 열렸다. <<http://www.scio.gov.cn>>.

⁹⁰ 중국의 대변인 제도는 1983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 말에는 전국단위로 확대되었는데, 이미 74개 국가 부문과 21개 성에 기자 발표, 대변인 제도를 개설했다. 徐莹, “中国公共外交的三大亮点,” 『今日中国论坛』, 3期 (中国政策科学研究会, 2008), pp. 104~105.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에 힘쓰고 있다 …… 각 당사자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그에 반대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한의 공동 이익이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 2012년 4월 25일)

“우리는 관련국들과 함께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2012년 2월 27일)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의 긍정적인 입장과 역할, 남북한 간의 자주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줄곧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고, 지지해 오고 있다 …… 중국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퉁취안(孔泉) 대변인, 2006년 2월 7일)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 쌍방의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1992년 9월 26일)

(3)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2011년 신설된 조직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자매조직이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종합적인 정보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신설된 조직이나,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본다면, 각종 인터넷 매체 등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 민족주의와 각종 왜곡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 공공외교의 다양한 정보들을 양산하

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⁹¹ 이 판공실의 주요 직무는 각종 인터넷 매체의 법제 마련, 지도·협조·감독·관리이며, 각종 인터넷 영상, 출판, 문화 영역 전반에 걸친 계획과 방향성 관련 작업이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선전 공작 관련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중국의 공공외교 콘텐츠 정책이 이 조직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중국 공공외교에서 주목해야 할 기구이다.

이 기구의 설립에 대하여 관련 인사들은 일종의 다두 관리 체계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를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과거에는 신문은 신문 판공실이, 영상은 방송총국(广播总局)이 관리를 했다면, 사이버 공간의 각종 신문이나 영상을 이 기구가 전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언론 통제의 성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화 작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좀 더 규범화되고 체계적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중국의 각종 공공외교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⁹² IT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상호 소통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중간 온라인상에서 반중·반한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자국 내의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를 통제함과 동시에, 한국 네티즌들의 반중감정 악화를 억제하는 홍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이버정보판공실은 향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중국 내 민족주의 여론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특히 한반도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있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율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⁹¹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5/05/c_121381532.html> (검색일: 2012.5.27).

⁹² 베이징에서 개혁개방 논단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2.4.20.

(4)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은 중국 다당합작제의 전형적 조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정협의 외교활동은 조직의 특성상 관방외교와 민간외교가 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협의 외교무대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93년 당시 리루이환(李瑞環) 정협 주석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 공공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협은 주로 중국의 제도, 특히 중국 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제 및 정치협상제도를 소개하고, 세계 각국 기관들과의 교류와 같은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현재 중국 종교계 평화위원회를 통한 종교 교류, 21세기 논단 등 포럼외교, 중국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한 경제계와의 교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공공외교만을 전담하는 공공외교소조를 설립하고, 중국 공공외교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자오치정(趙啟正)이 총괄 편집을 맡고, 공공외교를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 『공공외교계간(公共外交季刊)』을 발간하고 있다. 이 잡지는 국내외 공공외교의 사례를 소개 및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의 결과를 싣고 있다. 2012년 여름 현재 총 10집의 발간물이 나왔으며, 한국의 공공외교 성과에 관한 논문과 인터뷰 등이 특집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⁹³ 정협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외교부 등 양국의 공식 라인이 다루기 힘든 민감한 주제들을 예비적 단계에서 검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는 주로 실질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외교 행보가 많은 편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협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중국의 리진화(李金華) 부주석이 방북하여 친밀도를 높인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천종싱(陳宗興) 부주석이 “중조(북

⁹³ 공공외교계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내용은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pdq/>> (검색일: 2012.10.11).

친선은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⁹⁴ 바이리천(百立忱)부주석은 북중우호협력상호지원 협약 체결 51주년 기념연회 등에 참석하여,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⁹⁵

(5) 대사관

중국 외교부는 2010년 공공외교 원년을 선포하고,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선봉에 서있는 외교부 조직은 한국과 북한에 설치된 대사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주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한국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대한국 공공외교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공외교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생각보다는 미흡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對)한국민 창구인 주한 중국 대사관 누리집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한국어 번역 수준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한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북경시 영문 안내 사이트와 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교류 사이트를 소개하며, 간단한 뉴스 브리핑과 대사관 동정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⁹⁶

이에 반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의 누리집은 주한 대사관에 비해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하다. 북중관계의 문화, 과학기술, 교육관련 교류에 대한 개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주한 대사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누리집 소개에 따르면, 북한 주재 대사관이 북한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문화교류단 파견 관리이다. 북한에 파견되는 중국 예술단의 수가 10개 이상이며, 중국 정부 문화대표단이 매년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에 참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⁹⁴ 『연합뉴스』, 2011년 5월 23일.

⁹⁵ 『연합뉴스』, 2011년 7월 10일.

⁹⁶ 주한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chinaemb.or.kr/kor/>>.

‘중조 문화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출판·영화·미술 전시·체육 관련 인사들을 파견해 중국의 선진기술을 소개하고 있다.⁹⁷ 특기할 점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주한국 대사관과는 달리 특별 기획란을 두고 중조 친선의 해와 한반도 핵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중조 친선의 해 섹션에서는 중국과 북한 간 친선 교류를 강조하는 각종 문건들과 행사 내용, 지도자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다. 반대로 한반도 핵문제 섹션에서는 6자 회담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형적인 ‘2 트랙’ 외교의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양 대사관의 차이는 한국에는 대사관 외에 영사관, 문화원, 공자학원 등 중국 공공외교 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반면, 북한에는 이러한 기구들이 전혀 설립되지 않아 대사관에 공공외교의 역할이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민간 체계 및 프로그램

(1) 언론 매체

중국에는 다수의 방송 및 신문 매체들이 대한반도 공공외교 전선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국제방송(China Radio International)의 경우 중국의 문화와 역사, 최근 시사까지 중국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한국과 북한 청취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한국어 방송국을 두고,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⁹⁸ 신문매체로서 대표적인 것은 인민일보(人

⁹⁷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p.china-embassy.org/chn/>>.

⁹⁸ 중국국제방송 한국어 방송은 서울지역에 기지를 파견하고 있고, 한국·중국의 일부 지역들에 청취자 클럽과 해외에 모니터 요원도 두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비정기적으로 국내외 청취자들과의 만남 행사를 통해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중앙방송위원회, 한국 KBS방송공사와 인적교류, 프로그램 공동제작, 자료교환, 대표단 상호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http://kr.cntv.cn/>>.

民日報)이다.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로 알려진 것처럼,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관영 매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현재 한국어로 직접 중국의 소식을 서비스함으로써 한국독자 및 화교, 중국을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친중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⁹⁹ 인민일보의 인터넷 플랫폼인 인민망(人民網-people.com.cn)이 최근 한국어판을 개설했는데, 이는 중국 공공외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에 네티즌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인민망 한국어판은 영어·일본어·프랑스어 등에 이어 7번째 외국어 사이트이며, 2011년 9월 27일 개설되었다. 현재 중국 내 가장 큰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한국어 미디어 사이트이다. 인민망 한국어판은 폭넓은 한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중국 국내 뉴스를 전하는 동시에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핫이슈에 대한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 유학생들의 외국어 인터넷 매체 접속 현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한국어 인터넷 매체는 인민망 한국어판(30.6%)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대한민국 공공외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¹⁰⁰ 인민망의 한국 자회사인 피플 닷컴 코리아 대표 조우위보(周玉波)는 중국 내 한국어 교수 출신으로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대표적 친한 인사이며,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 저명 인사 학자 초청 현안 토론회인 ‘중한논단(中韓論壇)’을 정기적으로 개최하

⁹⁹ 인민일보 한국어 관련 서비스는 인민일보 한국어 사이트, <<http://korea.cpc.people.com.cn>>, e인민 한국대표처, <<http://www.einmin.co.kr/index.asp>>, 인민망 한국어 사이트, <<http://kr.people.com.cn/>> 등이 있다.

¹⁰⁰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고 있기도 하다.¹⁰¹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구시보(环球时报)의 경우도 한중섹션을 따로 개설하여 한중관계 관련 기사와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현안에 대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발표들은 양 국민들의 인식 차이를 알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¹⁰² 또한 환구시보 국제 기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중국 정부 및 중국 대중들의 인식과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한국이나 북한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 노선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잘 반영하는 편이고, 때로는 한국과 북한 모두를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환구시보의 상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독자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 내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언론인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中华全国新闻工作者协会, 이하 중국기협)와 신화통신사가 언론인 교류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기협의 언론인 교류 대상 국가에는 한국과 북한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국 보도의 질적 향상 및 상호 이해 촉진을 목표로 기자 교류를 진행 중이다. 중국기협은 1990년대 남북한 기자들을 비슷한 시기에 초청하여 남북한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곤 했다고 한다. 2008년에도 남북한 기자들이 한 호텔이 묵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러한 초청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³

¹⁰¹ 『조선일보』, 2012년 3월 2일.

¹⁰² 『환구시보』 한중섹션, <http://topics.huanqiu.com/Sino_SKorea/>.

¹⁰³ 심두보 외, 『만나고, 배우고, 공감하기: 글로벌 언론인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민간 기구(1.5 트랙 포함)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주요 민간 기구로는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중한우호협회, 중조우호문화교류협회 등이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기구는 중국국제우호연락회(中国国际友好联络会, 이하 연락회)이다. 연락회는 1984년 12월 베이징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사회와의 민간 우호 교류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전·현직 정부 관료, 외교관, 기업가, 교육자, 예술가 및 저명 학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 및 사회 각계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락회는 “국제민간우호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며, 세계평화와 발전을 촉진한다”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고, 6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우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제문제 연구도 중시해, 각종 학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조직인 평화발전연구 센터는 국내외 저명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연락회의 주요한 특징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 국가 지도자들이 연락회를 통해 외국의 국민을 맞이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 부문의 주요 관료들도 연락회를 통한 민간경로를 비공식적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락회 회장은 전 외교부 부장이자, 전국인대 외교위원인 리자오싱(李肇星)이 맡고 있으며, 전국 17개 지역에 산하 연락 지부를 두고 있다.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관련해서 이 기구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연락회의 누리집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¹⁰⁴ 연락회의 아시아부 직원들 중 한반도 담당 직원들은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2011-14), p. 163.

¹⁰⁴ 우호연락회가 동북아 지역을 특별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리집에서 서비스 되는 언어가 영어, 러시아어, 일어,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이트는 <<http://www.caifc.org.cn/kr>>.

모두 한국이나 북한에 유학경험이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며, 한국어 구사 능력 역시 수준급이다. 연락회는 2010년 한국의 통일연구원과 상호교류 협의를 체결하고, 통일관련 정책 세미나와 간담회 등 정기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부 기관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행보로는 리자오싱 회장이 연락회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민간 교류의 형태이지만, 사실상의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연락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대표단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등을 만나 북중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정일 사후,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민간 형태로 사전 조율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둘째, 중한우호협회(中韓友好協會)이다. 1980년대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증가하자, 한국의 중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1982년 한중우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중우호협회의 중국측 카운터파트(counterpart) 설립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1993년 중국대외우호협회와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등 중국의 정부 산하 단체와 관련 기업들이 중한우호협회를 설립했다. 중한우호 협회는 현재 뤼하오차이(羅豪才) 중국정협 부주석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증진 및 친선도모, 세계평화유지,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과학기술, 보건,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한·중 교류 협력 확대에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과의 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전문가 초청 강연회, 중국어(한국어) 말하기 대회, 각종 문화 교류(미술 전시회, 음악 공연), 청소년 우호 사절단 교류, 한중 여성

¹⁰⁵ 『中国新闻网』, 2012年 5月 8日.

대표단 교류 등이다. 특히 협회는 중국의 각 성과 도시들이 한국의 지역 자치 단체와 자매 결연을 희망할 경우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자매 결연 도시에 대한 소식과 동정을 매번 업데이트 하고 있다.¹⁰⁶

한편 북한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단체로서는 중조우호문화교류협회(中朝友好文化交流协会)가 있다. 이 협회는 비교적 최근인 2009년 10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반면, 북한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산발적인 문화우호교류를 좀 더 체계화 시키고 집중시키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립시기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있던 시점이어서, 중국이 민간 외교를 통한 북한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더구나 “북중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자”든지, “양국 인민의 세세대대(世世代代)의 우호관계 지속의 열망을 실현하자”는 등의 표어들은 중국의 대북한 공공외교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케 한다. 협회는 중국 인민과 북한인민과의 우의를 도모하고, 양국 간 문화·과학·체육 등 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¹⁰⁷

마지막으로 반관반민 성격의 싱크탱크, 연구단체들이다.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 개혁개방 논단 등은 한국 및 북한의 주요 싱크탱크들과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워크숍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한국 통일연구원의 경우는 교류 역사가 20년 가까이 되었으며, 한중미래 포럼(한국국제교류재단-중국인민외교학회) 역시 1994년부터 개최되어 한중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¹⁰⁶ 현재까지(2011년 6월 통계) 한국의 133개 도시가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이다. <<http://www.china-korea.org/html/node/56-1.html>> (검색일: 2012.10.11).

¹⁰⁷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6213095.html>> (검색일: 2012.5.20).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최근에는 한중 전략 세미나,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한중 안보전략 대화 등 양국의 연구관련 단체와 싱크탱크 들 간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교육 관련

교육 관련 공공외교 역시 주요한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영역이다. 교육 외교는 주로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 중국 관련 직업에 종사할 한국인들을 친중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과거에 비해 중국이 한반도 공공외교에 신경 쓰고 있는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 및 장학금 제도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2년 현재 중국 국내 176개 대학의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생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유학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유학생 지원 사업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⁸ 특히 중국에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이 시기를 즈음에서 장학금 및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과거에 비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교육 외교는 북한의 청년 인적 교류 규모로 보았을 때,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¹⁰⁹ 중국은 북한과의 상호 교류 차원에서 정부 장학생을 교환하고 있다. 현재 재중 북한 유학생은 매년 400명(본과, 대학원생 포함) 수준이고, 주로 이공계 계통의 전공을 공부하고 있다. 중국은 유학생을 매년 정부 장학생 60명, 자비 유학생 70명 정도 수준으로 파견하고 있다. 한국과의 유학생 교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¹⁰⁸ <<http://www.csis.edu.cn>>.

¹⁰⁹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p.china-embassy.org/chn/>> 참조.

숫자이지만,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하고, 중국이 정부 장학생 수를 북한보다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을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교육 투자는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중국의 주요 대학들이 북한의 주요 대학들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2000년대 이래 교육대표단 교류가 80여 차례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교육 지원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무상 지원, 각종 교육 포럼 제공 등이 있다. 북한 내 중국어 보급과 확산에도 노력중이다. 매년 2명의 중국어학 교원을 평양외국어대에 파견하고, 매년 북한의 30명 중국어 교사들에게 중국 정부 초청의 중국어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양외대 외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등의 중문과를 지원하고 있다.¹¹⁰

교육기관 간 교류나 지원 외에도 중국의 대북한 공공외교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한 전수와 교육이다. 북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유학생 교류를 통해 중국의 선진 기술에 대한 학습을 해왔으며, 실무현장에서의 학습도 상당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¹ 중국의 성공한 농촌 개혁 모델에 대한 시찰단 파견과, 실질적인 중국식 자본주의 실무 학습을 위한 연수단 파견 등이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¹¹² 또한 북한의 황금평 특구와 나선특구 담당 관료 100여 명이 중국 동북지역 대학에서 경제 특구 연수를 받았다는 보도 등을 볼 때, 중국은 교육 외교의 방식으로 개혁개방의 경험 전수 및 인력 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

¹¹⁰ 2011년에는 30여개 학교에 5,000여 권의 중국어 교재를 기증했으며, 매해 2명의 북한 중문과 학생을 초청, 세계 대학생 중국어 경연대회에 참가시키고 있다. 북한 내에서도 중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언어이며,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학생들의 성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p.china-embassy.org/chn/>> 참조.

¹¹¹ 중국 공산당고 산하의 개혁개방 논단 관계자는 북한의 실무연수단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한 청취를 하고 있다고 암시한 바 있다. 베이징에서 개혁개방 논단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2.4.20.

¹¹² 『중앙일보』, 2012년 7월 20일.

된다.¹¹³

교육 관련 공공외교는 북한에 비해 한국에 대한 것이 훨씬 우월한 상황이다. 한·중 수교 이전, 중국 내 ‘한국학’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학문적 성과가 주된 바탕이 된 ‘조선학’에 가까웠으나, 양국 수교를 기점으로 한국 쪽으로 판도가 급속도로 변화되었다. 이는 한중관계의 발전에 따라 경제 실무 인력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실무적인 언어 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언어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 2,305개(4년제 1,090개, 3년제 1,215개) 대학 가운데 211개의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과의 공식명칭이 조선어과 혹은 조선학과인 곳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국을 명칭으로 쓰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는 한국학 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이다.¹¹⁴

또한 민간 기구로서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가 있다. 협회는 중국 교육계의 대외교류를 담당하는 주요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전 세계 국가들과의 교육·과학·문화 교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협회는 한국과 북한의 대학 및 교육 기관들과도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으며, 한반도 관련 업무는 아시아·태평양부가 주도하고 있다.¹¹⁵

¹¹³ 『연합뉴스』, 2012년 7월 9일.

¹¹⁴ 이는 중국 내의 많은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양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 대학의 교과목 현황을 보면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 문화(사회) 이해 목적의 교과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권재욱, “중국 지역의 한국(어)학 현황,”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6.28); 송현호, “중국지역의 한국학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한국인문학회, 2012), pp. 463~504.

¹¹⁵ <<http://www.ceaie.edu.cn/>>.

3. 전문가 인식조사

가. 중국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 문항작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특징

앞에서 중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사례,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았지만, 중국의 일반 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를 일관적 틀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는 문헌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공공외교 실태를 보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도 앞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계시켜 구성하였다. 즉, 중국의 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공공외교의 다양한 개념과 국가별 이해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규정한 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정의를 전문가에게 먼저 제시함으로써 연구와 조사의 일관성 및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는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과 공공외교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총 4개의 부분,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중국 공공외교의 전반적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이고, 2부와 3부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과 공공외교에 관한 설문이며, 4부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부 중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관한 문항은 중국 공공외교의 추진성과, 추진목표, 추진체계, 행위자, 수단, 프로그램, 대상 지역, 주요

자산 등 9개로 구성하였다. 2부인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주변국, 한반도 통일 시기, 한반도 정책의 우선 순위,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 형태, 북한급변 가능성 및 대비 등 10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3부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관련 중국 공공외교의 평가 및 수행기관, 대상, 목표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공외교의 대상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남북한과 주변국 간의 친밀도·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등을 묻는 문항도 포함시켰다. 마지막 4부는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중국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1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사례인 공자학원 관련 문항과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특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탈북자 관련 문항, 그리고 중국의 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 문제가 모두 포함되면서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양안관계 및 양안통일과 한반도 통일관련 문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전문가 선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특징

본 연구의 주제인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반도 문제와 공공외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본 조사에서는 전문가 40명을 선정하는 데 이러한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외교의 종사자나 오랫동안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료, 한반도 관련 여론을 선도하는 한국담당 기자나 특파원 등 언론인, 한반도와의 경제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인, 정부부처 산하의 정책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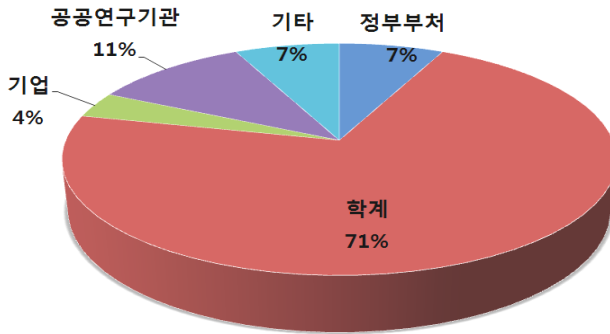
III

IV

연구기관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과정에 일정한 참여와 영향을 미치는 연구원, 한반도 관련 인재를 양성하면서 정책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소속의 교수 및 연구원, 한반도 관련 업무를 하는 국제 NGO 활동가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중국에서 드문 국제 NGO 활동가를 제외한 관료, 언론인, 기업인, 연구원, 교수 등을 본 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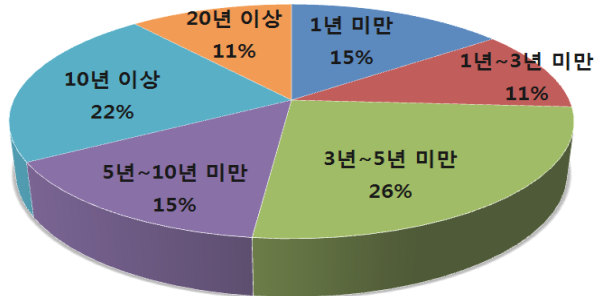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조사에 응한 중국 전문가의 소속 기관 분포는 학계 전문가가 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연구기관 소속이 11%, 정부부처와 기타 소속이 7%, 기업 소속이 4%를 차지했다(<그림 III-1> 참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학계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한반도 전문가들이고, 일부는 대외관계를 전공한 공공외교 전문가들이다.

〈그림 III-1〉 중국 전문가의 소속 기관



조사 대상 중국 전문가의 한반도 관련 업무나 연구 경력은 <그림 III-2>에서 보듯이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업무 경력이 '3~5년 미만'인 전문가가 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이 22%, '5~10년 미만'과 '1년 미만'이 각각 15%, '20년 이상'과 '1~3년 미만'이 각각 11%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Ⅲ-2〉 중국 전문가의 업무 경력



이밖에 중국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지역별 특성과 분포도 고려했다. 즉, 중국의 공공외교나 한반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유력한 전문가가 많은 수도권 북경 지역과 국제경제 중심지인 상해 지역의 전문가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한반도와 지리적·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북 지역의 전문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북경 및 상해지역 전문가는 각각 15명, 동북 지역 전문가는 10명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 전문가의 지역적 편중을 방지함으로써, 조사의 대표성과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사 방법은 면접 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회수를 병행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였다.

나. 중국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중국의 공공외교 일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공공외교는 전체 공공외교의 하위 또는 일부로써 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 전반에 관한 기본적 실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관한 사항을 중국 전문가에게 질문하였다. 다만 공공외교의 추진 내용이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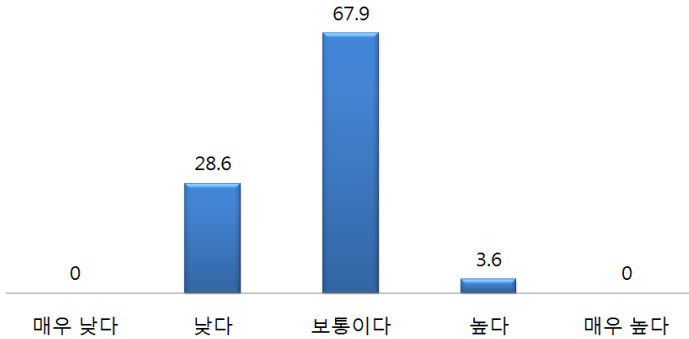
광범위하고 국가별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 규정한 공공외교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였다.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상대방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informing) 이해(understanding)시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한 후,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추진체계, 주요 행위자, 주요 수단, 프로그램별 비중, 대상 지역, 주요 자산 등을 중국 전문가에게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공공외교의 추진성과 평가이다.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공공외교에 있어서 중국의 추진성과를 전문가에게 물었다. 응답자 중 67.9%가 ‘보통이다’를 택했고, 28.6%가 ‘낮다,’ 3.6%만이 ‘높다’를 선택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통 혹은 그 미만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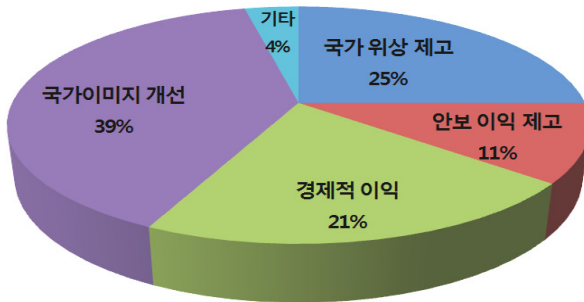
(단위: %)



둘째, 중국이 추진 중인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질문 결과는 <그림 III-4>에서 보듯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3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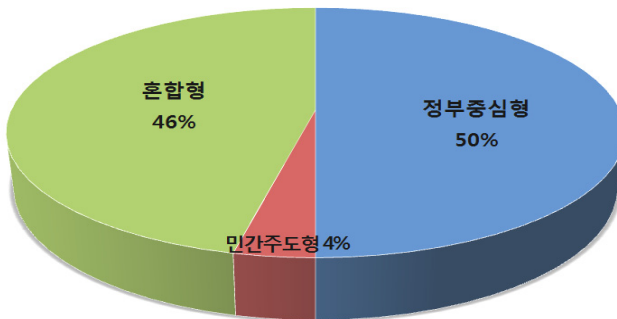
‘국가 이미지 개선’이었으며, ‘국가 위상 제고’(25%), ‘경제적 이익’(21%), ‘안보이익 제고’(11%), ‘기타’(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Ⅲ-4〉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셋째, 중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정부 중심형,’ 민간이 중심이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국가가 통제·관리하면서 민간이 추진하는 ‘혼합형’ 및 ‘기타’ 등 4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0%가 ‘정부 중심형’이라고 답하였으며, ‘혼합형’이 46%의 비율을 차지했다. ‘민간 주도형’이 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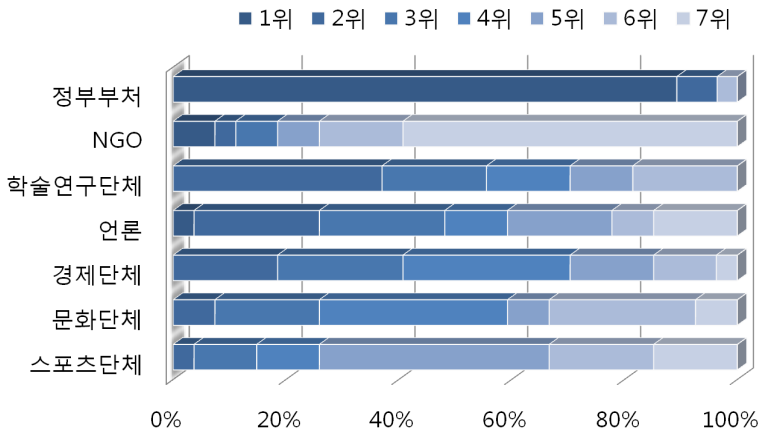
〈그림 Ⅲ-5〉 중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I
II
III
IV

넷째,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처·NGO·학술 연구 단체·언론·경제 단체·문화 단체·스포츠 단체 등을 제시한 후, 중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설문지 상에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로는, 1순위로 정부부처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 학술 연구 단체, 3순위에서 언론 및 경제 단체가 최고의 비율을 나타냈다. 5순위에서는 문화 단체, 6순위에서는 NGO, 7순위에서는 스포츠 단체를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아, NGO와 스포츠단체를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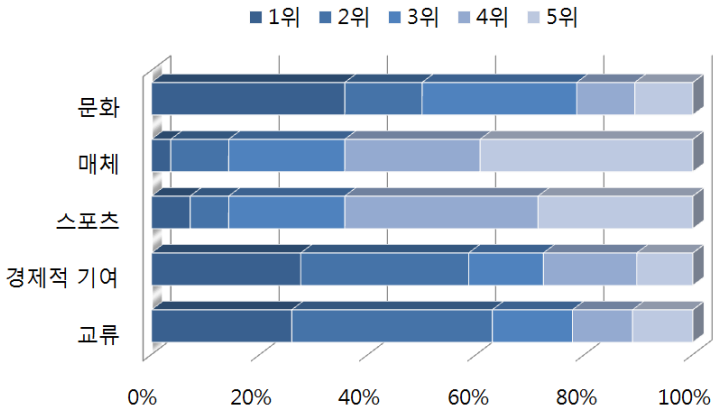
〈그림 III-6〉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다섯째,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음식, 예술), 매체, 스포츠, 경제적 기여(ODA, 투자), 교류(포럼, 인적 교류, 초청 유학생)를 제시하고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7>에서와 같이 조사 결과, 1순위로 ‘문화’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교류’가 가장 높았다. 2순위까지의 비중을 보면, ‘교류,’ ‘경제적 기여,’ ‘문화’의 순이었다.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는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이 ‘문화,’ ‘교류,’

‘경제적 기여’임을 보여 주는 반면, ‘매체’와 ‘스포츠’는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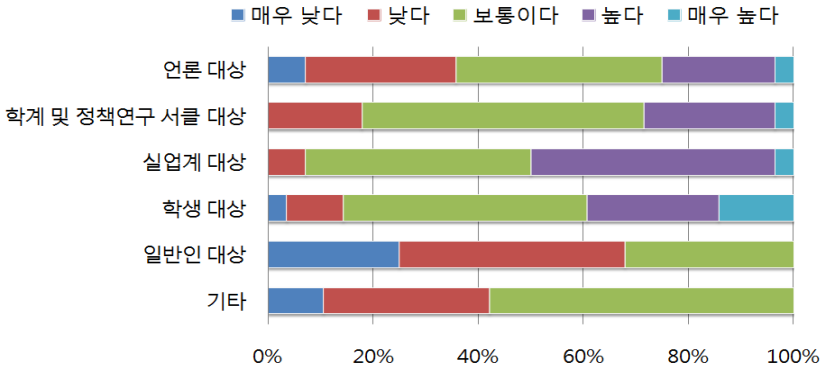
〈그림 III-7〉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여섯째,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실업계, 학생, 일반인 등 대상별 프로그램 각각의 비중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중 ‘높다’ 이상의 응답만을 보았다. 그 결과, ‘실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 대상’,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 ‘언론 대상’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매우 높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일반인이나 기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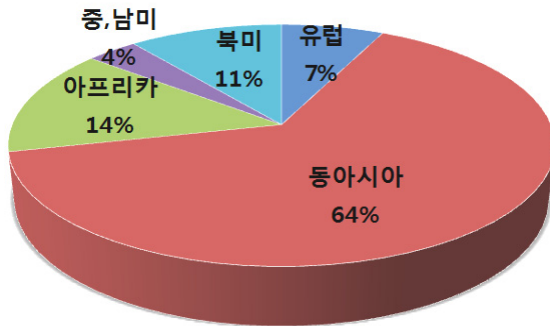
I
II
III
IV

〈그림 Ⅲ-8〉 중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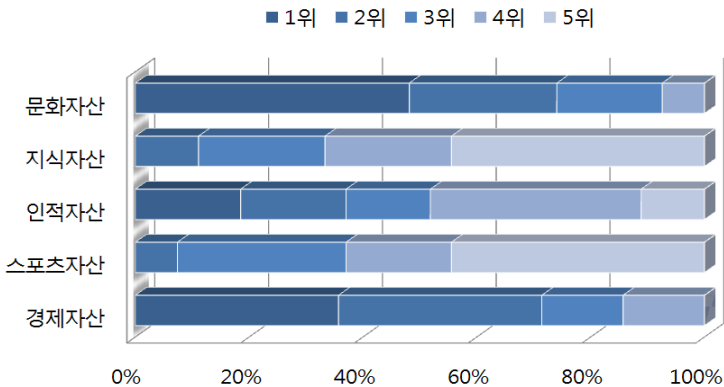
일곱째, 중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북미·오세아니아 등을 제시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아시아(64%)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각 아프리카(14%), 북미(11%), 유럽(7%), 중남미(4%) 지역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 공공외교의 중점 대상 지역이 동아시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9〉 중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여덟째,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 자산·지식 자산·인적 자산·스포츠 자산·경제 자산을 열거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화 자산’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경제 자산’이 2위, ‘인적 자산’이 3위, ‘지식 자산’이 4위, ‘스포츠 자산’이 5위로 각각 선택되었다. 이 응답 결과를 통해 볼 때,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은 ‘문화 자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0〉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2)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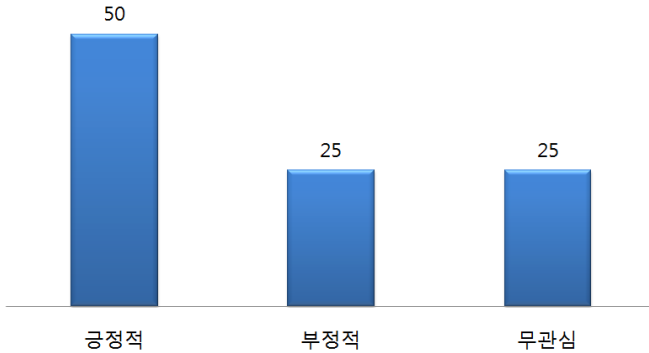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에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과 공공외교 정책이 중첩되고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바, 중국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입장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입장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에게 한국 주도의 통일 한국에 대한 입장,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주변국, 한반도 통일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 형태, 북한의 급변 가능성 및 중국의 대비 등을 질문하였고, 그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전문가에게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림 III-11>에서 보듯이, 응답 결과 50%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부정적이다’와 ‘무관심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25%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조사 대상 전문가 40명 중 28명의 응답자 중에서 나타난 비율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질문의 요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어느 일방의 주도가 아닌 합의에 의한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전문가까지 고려하면 실제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부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III-11>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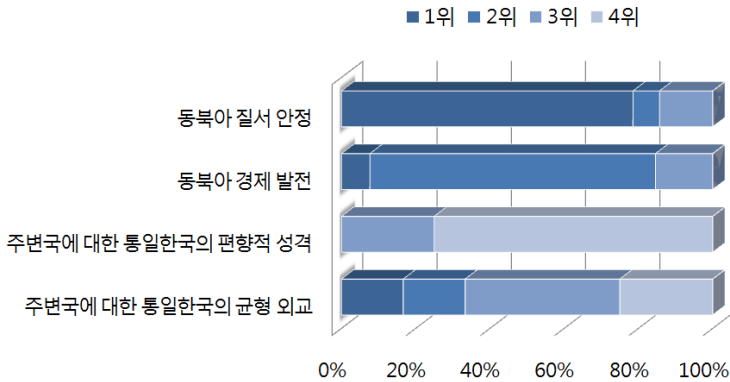
(단위: %)



어쨌든,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답지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다시 물었다. 동북아 질서 안정, 동북아 경제 발전,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편향적 성격,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균형 외교 등 4개의 보기를 주고 순위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위는 ‘동북아 질서 안정’이었다. 2위는 ‘동북아 경제 발전’이었으며, 3위는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균형 외교,’ 4위는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편향적 성격’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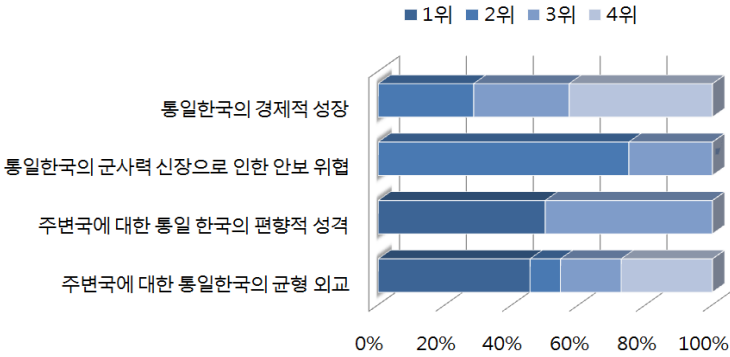
〈그림 Ⅲ-12〉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



반면, 통일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답지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나열한 후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4개의 보기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성장,’ ‘통일한국의 군사력 신장으로 인한 안보 위협,’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편향적 성격,’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균형 외교’였다. 응답 결과, 1위는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편향적 성격,’ 2위는 ‘통일한국의 군사력 신장으로 인한 안보 위협,’ 3위는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균형 외교,’ 4위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성장’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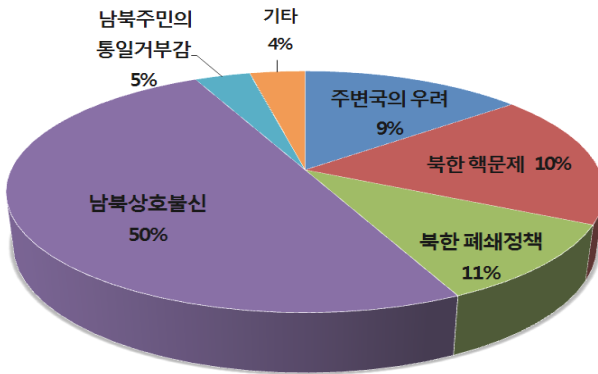
I
II
III
IV

〈그림 Ⅲ-13〉 한국 주도의 통일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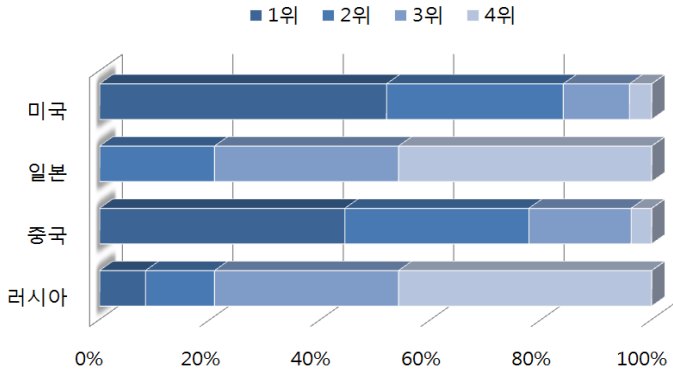
둘째, 중국의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변국의 우려·북한 핵문제·북한의 폐쇄정책·남북한 상호 불신·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등을 제시한 후, 표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남북한 상호 불신’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북한의 폐쇄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이 11%, ‘북한 핵문제’가 10%, ‘주변국의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9%, ‘남북 주민의 통일거부감’이 5%, ‘기타’가 4%로 나타났다.

〈그림 Ⅲ-14〉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



셋째, 중국 전문가에게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국가를 순위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1위로 선택한 비율로 보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끼칠 국가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III-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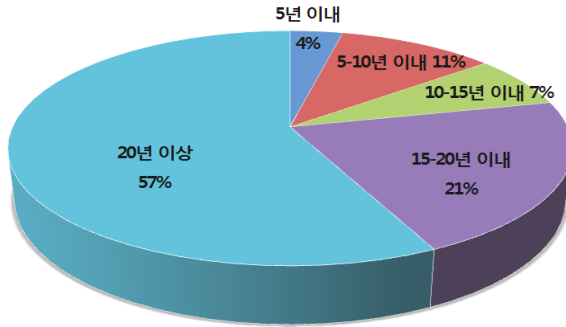
〈그림 III-15〉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주변국



넷째, 한반도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5년 단위로 구분해서 물어보았다. 사실상, 한반도 통일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주변국의 대응도 긴밀하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가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21%가 ‘15~20년 이내’라고 응답하였다. ‘5~10년 이내’(11%), ‘10~15년 이내’(7%), ‘5년 이내’(4%)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응답비율로 보아 응답자 대부분이 한반도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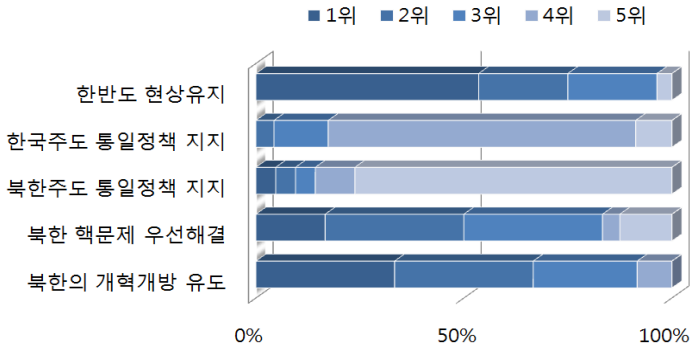
I
II
III
IV

〈그림 Ⅲ-16〉 한반도 통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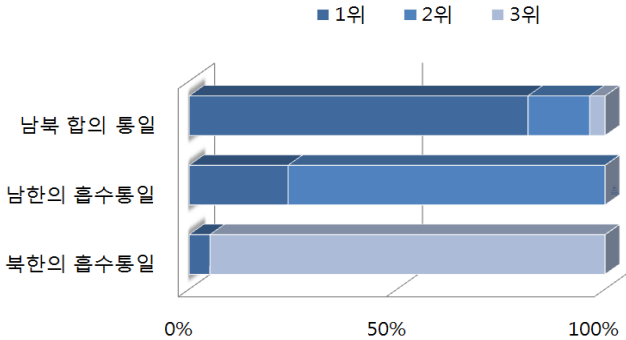
다섯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중국 전문가에게 한반도 현상유지, 한국주도 통일정책지지, 북한주도 통일정책지지, 북한 핵문제 우선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을 제시하고 순위 별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 1순위를 선택한 비율을 보면, ‘한반도 현상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북한 핵문제 우선해결,’ ‘북한주도 통일정책지지,’ ‘한국주도 통일정책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현상유지와 북한 개혁개방 유도에 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7〉 중국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



여섯째,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남북 합의 통일’이었으며, 2순위는 ‘남한의 흡수 통일,’ 3순위는 ‘북한의 흡수 통일’이다. 그동안 중국이 남북 합의 통일을 가장 선호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응답 비율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되나, 주목되는 점은 ‘한국의 흡수 통일’을 2순위로 응답한 결과이다. 이는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보다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중국 내에 존재함을 보여 준다.

〈그림 III-18〉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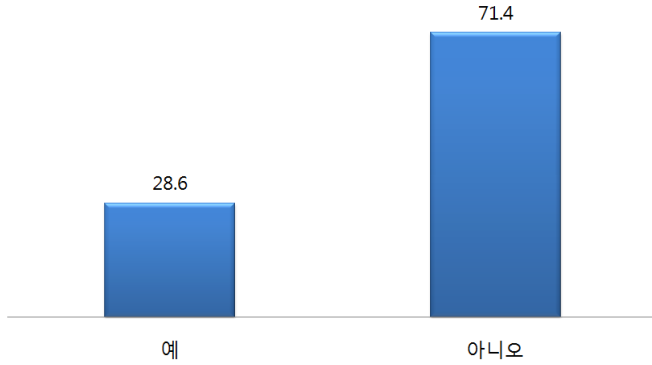


일곱째, 북한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전문가에게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급격한 정치적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28.6%가 ‘예’를 택한 반면, 71.4%가 ‘아니오’를 택함으로써, 응답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예상하고 있었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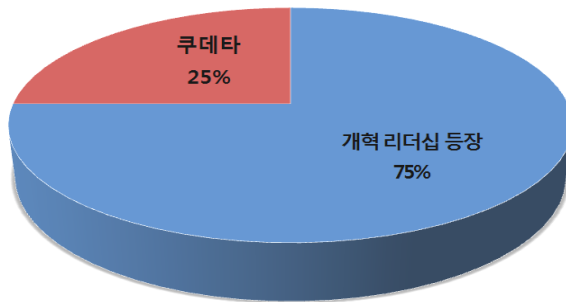
〈그림 Ⅲ-19〉 향후 5년 이내 북한의 급변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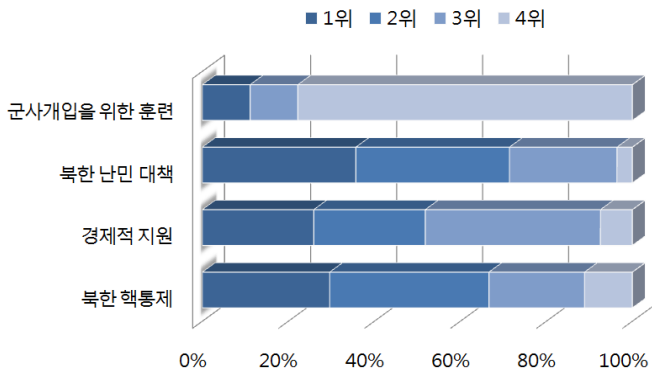
이어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북한 급변의 형태로서 개혁 리더십의 등장, 쿠데타, 시민혁명의 보기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개혁 리더십 등장’이라는 응답이 75%를 차지하였으며, ‘쿠데타’라는 응답은 25%를 차지했으나, ‘시민혁명’을 택한 응답은 없었다. 응답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 발생한다면 개혁 리더십이나 쿠데타와 같이 권력 상층부의 동요나 혼란에서 기인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0〉 북한 급변의 형태



여덟째, 그렇다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중국이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보기로는 군사개입을 위한 훈련, 북한 난민 대책, 경제적 지원, 북한 핵 통제를 제시하고 순위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북한 난민 대책’을 1순위로 꼽았고, 그 뒤를 이어 ‘북한 핵 통제’가 2위, ‘경제적 지원’이 3위, ‘군사개입을 위한 훈련’은 4위로 나타났다.

〈그림 III-21〉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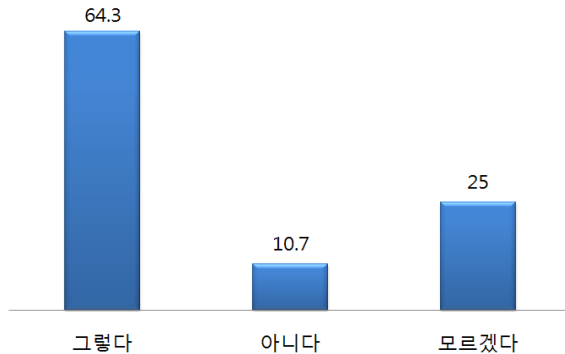
(3)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분야 공공외교

3부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평가와 수행기관, 목표, 대상들에 대해 중국 전문가에게 질의하였다. 아울러 공공외교의 대상인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한반도의 주민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중국이 인식한다면, 중국의 공공외교도 이를 시정하는 방향에 초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공공외교의 대상지역인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I
II
III
IV

첫째,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질문에 앞서,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정의를 제시했다. 즉,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한반도 (주변)정세, 남북관계,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 등에 관련된 공공외교”로 정의한 후, 이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한반도 통일관련 분야의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아니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10.7%, ‘모르겠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25%를 차지했다. 대체로 과반 이상의 전문가가 중국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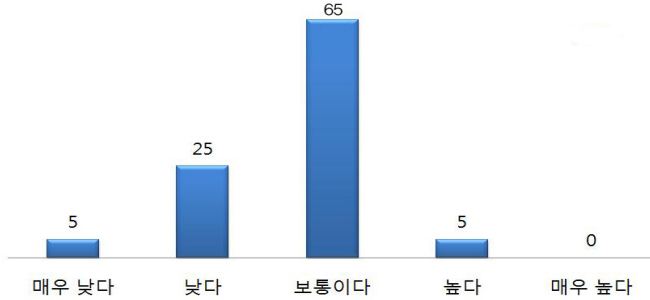
〈그림 III-22〉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이어서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5%가 ‘보통이다’, 25%가 ‘낮다’, 5%씩의 응답자가 ‘매우 낮다’와 ‘높다’를 각각 선택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에 대해서 별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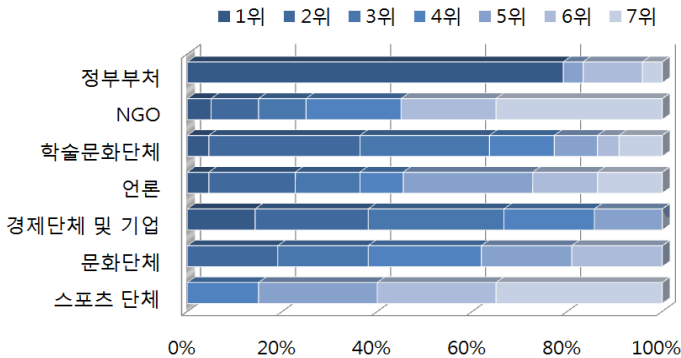
〈그림 Ⅲ-23〉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단위: %)



둘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수행 기관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부처, NGO, 학술 연구 단체, 언론, 경제 단체, 문화 단체, 스포츠 단체 등 7개의 주체를 제시하고 순위별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 ‘정부부처’가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2순위에서는 ‘학술 연구 단체,’ 3순위에서는 ‘경제 단체 및 기업’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4순위에서는 ‘문화 단체,’ 5순위에서는 ‘언론,’ 6순위에서는 ‘NGO,’ 7순위에서는 ‘스포츠 단체’라는 응답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일반 공공외교의 수행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Ⅲ-24〉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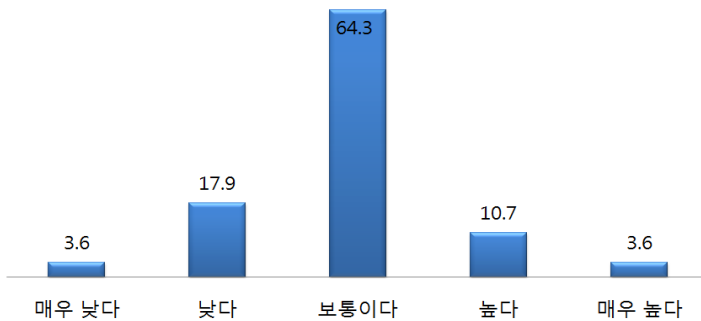


I
II
III
IV

셋째,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64.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낮다’는 응답이 17.9%, ‘높다’는 응답이 10.7%, ‘매우 높다’와 ‘매우 낮다’는 응답이 각각 3.6%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를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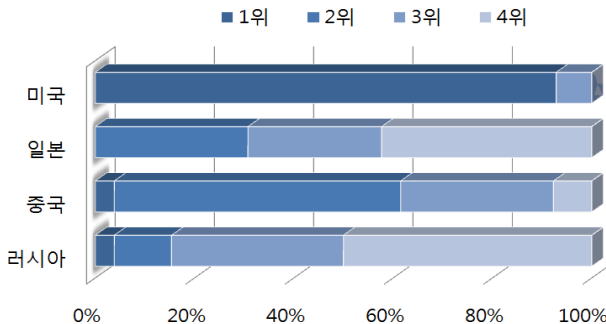
〈그림 III-25〉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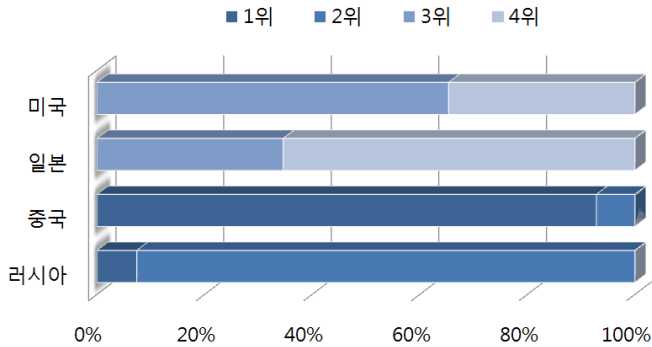
넷째, 한반도 주변4국과 한국의 친밀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순위별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위가 미국이었으며,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 러시아가 4위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III-26〉 한국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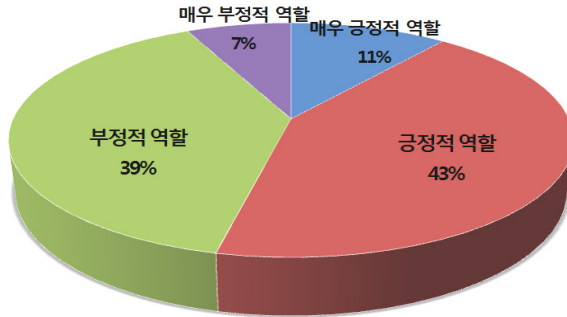
다섯째, 이어서 북한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역시 순위별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는 중국이었고, 그 뒤를 이어 러시아가 2위, 미국이 3위, 일본이 4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림 Ⅲ-27〉 북한과 한반도 주변4국의 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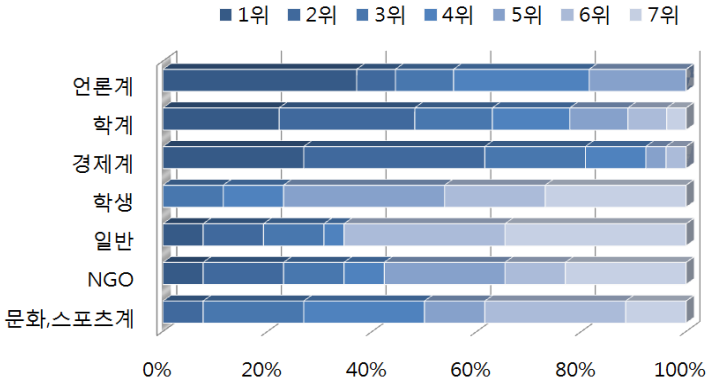
여섯째, 한국인들이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43%가 ‘긍정적 역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정적인 역할’이 39%, ‘매우 긍정적인 역할’이 11%, ‘매우 부정적인 역할’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분포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예상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비율은 54%로 부정적으로 예상할 것이라는 비율 4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8〉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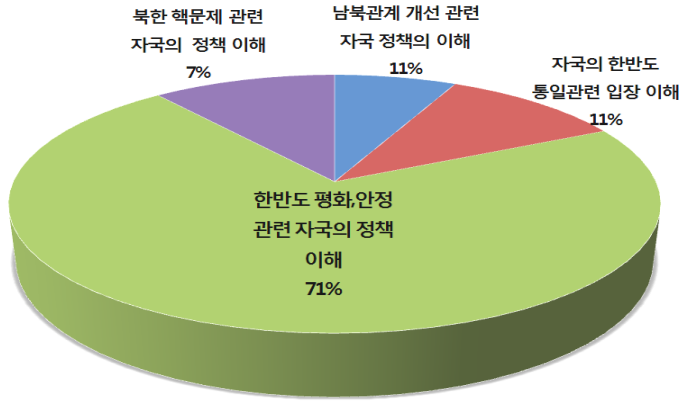
일곱째, 한반도 통일관련 중국의 공공외교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이 추진 중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주요 대상의 비중을 순서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론’이었으며, 경제가 2위, 학계 3위, NGO 4위, 일반 5위, 문화·스포츠계가 6위, 학생이 7위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를 중국의 일반 공공외교의 대상과 비교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점이 달랐다. 즉, 일반 공공외교 대상에서 4위를 차지했던 언론이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대상에서는 1위를 차지한 점과 일반 공공외교 대상에서 2위를 차지했던 학생이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대상에서는 제일 낮은 7위를 차지한 점이다. 이는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는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Ⅲ-29〉 한반도 통일관련 중국의 공공외교 대상



여덟째, 한반도 통일관련 중국 공공외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전문가에게 북한 핵문제 관련 자국의 정책 이해, 자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입장 이해, 한반도 평화안정 관련 자국의 정책 이해, 남북관계 개선 관련 자국 정책의 이해 등 4개의 예시를 제시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한반도 평화·안정 관련 자국의 정책 이해’라고 응답하였고, ‘자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입장 이해’와 ‘남북관계 개선 관련 자국 정책의 이해’가 각각 11%, ‘북한 핵문제 관련 자국의 정책 이해’가 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0〉 한반도 통일관련 중국 공공외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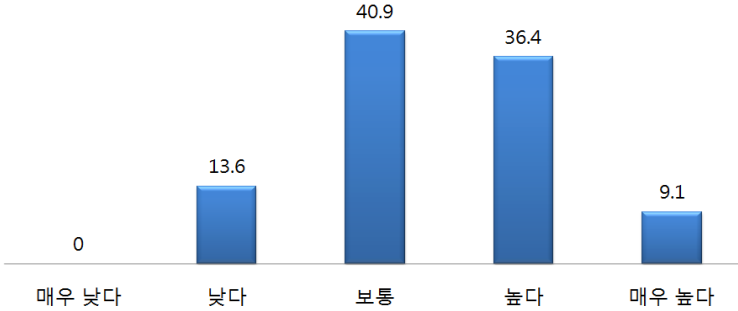
(4) 중국의 특성에 따른 세부 문항

여기에서는 중국의 특성과 관련하여, 중국 공공외교의 대표적 사례인 공자학원에 대한 문항과 중국과 한반도 간 특수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탈북자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와 밀접한 양안관계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문가에게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자학원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일반 공공외교 차원과 한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 차원의 질문을 하였다. 일반 공공외교 차원에서, 중국 전문가에게 공자학원의 프로그램이 상대국 주민의 중국 이해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 결과는 각각 ‘매우 높다’ 9.1%, ‘높다’ 36.4%, ‘보통’ 40.9%, ‘낮다’ 13.6%, ‘매우 낮다’ 0%로 나타나, 공자학원 프로그램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Ⅲ-31〉 상대국 국민의 중국 이해에 대한 공자학원 프로그램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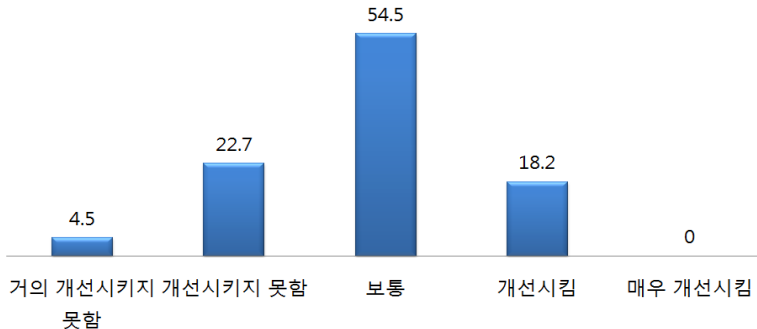
(단위: %)



한반도 차원에서 중국의 전문가에게 공자학원이 한국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개선시켰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 결과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의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응답 22.7%, ‘개선시킨다’는 응답 18.2%, ‘거의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응답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공자학원의 기여도를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 공자학원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2〉 한국 내 중국 국가 이미지 개선에 대한 공자학원의 기여도

(단위: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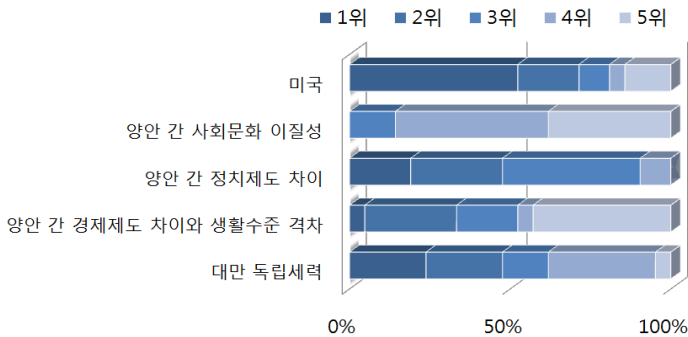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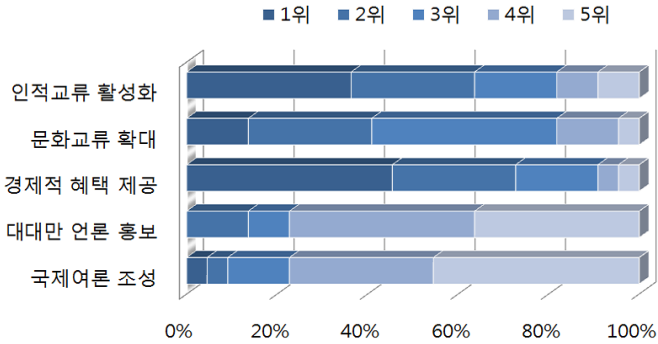
다음으로, 양안관계 관련 중국의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우선 양안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미국,’ ‘양안 간 사회문화 이질성,’ ‘양안 간 정치제도 차이,’ ‘양안 간 경제제도 차이와 생활수준 격차,’ ‘대만 독립세력’ 등을 제시하고 중요 순위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미국’을 장애요인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2순위로는 ‘대만 독립세력,’ 3순위는 ‘양안 간 정치제도 차이,’ 4순위는 ‘양안 간 경제제도 차이와 생활수준 격차’로 응답하였다. 양안 간 사회문화 이질성은 양안 통일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33〉 양안통일 장애 요인



이어서 양안 통일을 위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떤 공공외교 수단을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전문가에게 인적 교류의 활성화, 문화 교류 확대, 경제적 혜택 제공, 대대만 언론 홍보, 국제여론 조성 등을 제시하고 중요 순위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 혜택 제공’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인적 교류 활성화,’ 3순위에는 ‘문화교류 확대,’ 4순위에는 ‘대대만 언론 홍보,’ 5순위에는 ‘국제여론 조성’을 각각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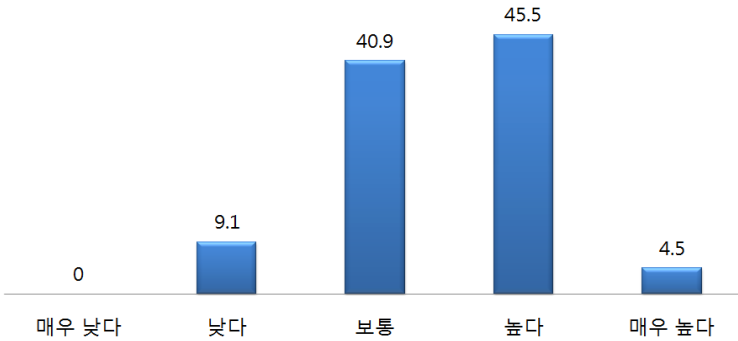
〈그림 III-34〉 중국의 대대만 공공외교 수단



또한 중국의 양안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성과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응답 결과는 ‘높다’는 평가가 45.5%로 가장 많았고, ‘보통’ 40.9%, ‘낮다’ 9.1%, ‘매우 높다’ 4.5%, ‘매우 낮다’ 0%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양안 통일을 위한 중국의 공공외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5〉 양안통일관련 공공외교 성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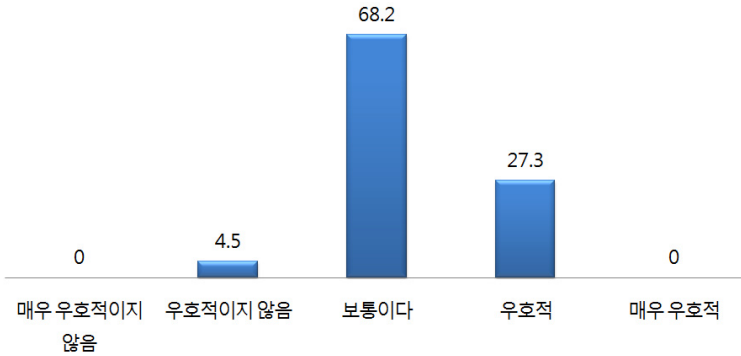
중국 전문가에게 중국(인)에 대한 대만 주민과 대만 정부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대만 주민이 중국(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우호적이

I
II
III
IV

라고 평가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우호적’이라는 응답이 27.3%, ‘우호적이지 않음’이 4.5%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III-36〉 대만 주민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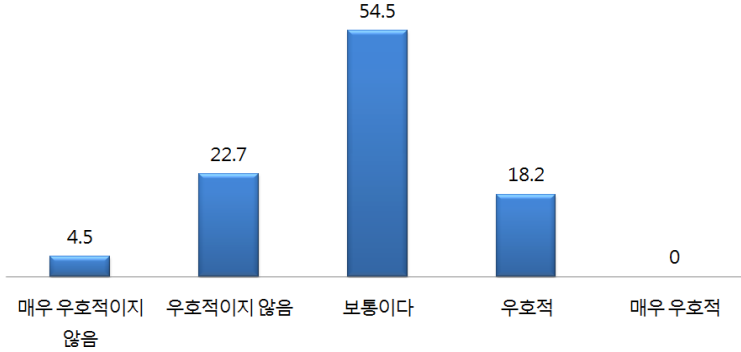
(단위: %)



대만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보통’ 54.5%, ‘우호적이지 않음’ 22.7%, ‘우호적임’ 18.2%, ‘매우 우호적이지 않음’ 4.5% 순으로 나타나, 대만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는 보통 이하의 호감도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만 주민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대만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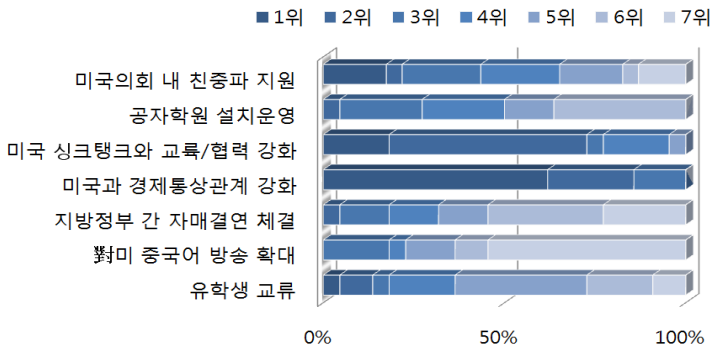
〈그림 III-37〉 대만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

(단위: %)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추진하는 공공외교 정책으로, ‘미국 의회 내 친중파 지원,’ ‘공자학원 설치·운영,’ ‘미국 싱크탱크와 교류협력 강화,’ ‘미국과 경제통상관계 강화,’ ‘지방 정부 간 자매결연 체결,’ ‘대미 중국어 방송 확대,’ ‘유학생 교류’ 등을 제시한 후, 중국 전문가에게 중요 순위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는 ‘미국과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2순위로는 ‘미국 싱크탱크와 교류·협력 강화,’ 3순위로는 ‘미국 의회 내 친중파 지원’이 선택되었다. 가장 낮은 7순위에는 ‘대미국 중국어 방송 확대’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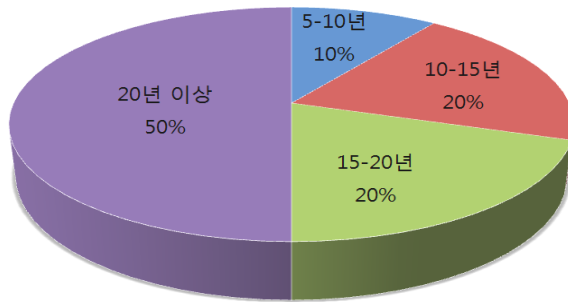
〈그림 III-38〉 대미 공공외교 정책



I
II
III
IV

<그림 Ⅲ-39>에서와 같이, 중국 전문가에게 양안의 통일이 언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10~15년,’ ‘15~20년’이라는 응답이 각각 20%, ‘5~10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은 양안 통일의 시기를 중장기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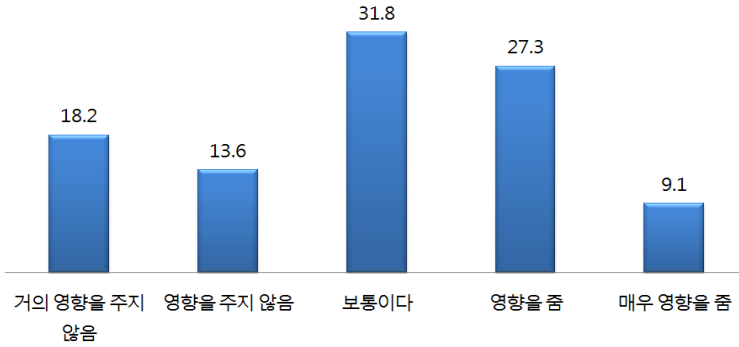
〈그림 Ⅲ-39〉 양안통일 시기



양안 관계 관련한 마지막 문항으로 양안의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이 상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 결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향을 준다’(27.3%)와 ‘매우 영향을 준다’(9.1%)의 응답을 합친 비율이 36.4%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13.6%)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18.2%)를 합친 비율 31.8%보다 약 4.6%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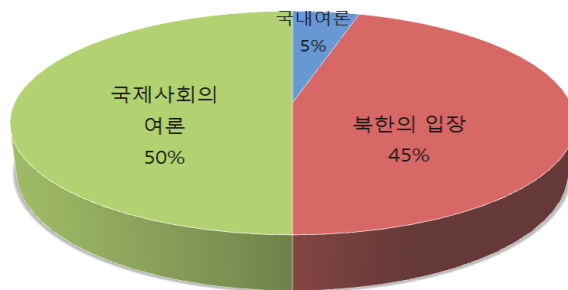
〈그림 III-40〉 양안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상호 영향

(단위: %)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특수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과 중국의 입장과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서,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는 물론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현안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전문가에게 중국이 탈북자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50%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45%는 ‘북한의 입장’을, 5%는 ‘국내 여론’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국제사회의 여론과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41〉 탈북자 정책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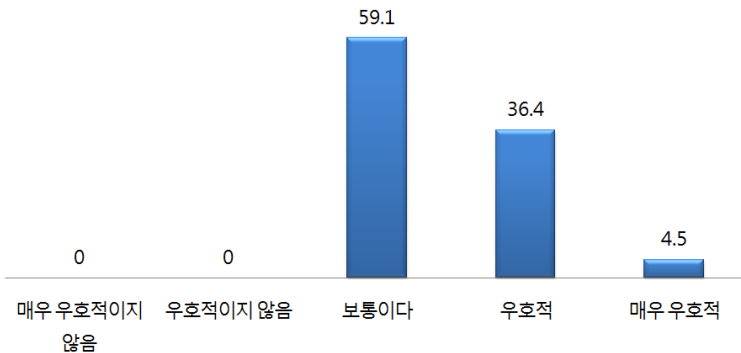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그렇다면, 중국 전문가에게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북한에 우호적인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우호적’(36.4%), ‘매우 우호적’(4.5%)이라는 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우호적이지 않음,’ ‘매우 우호적이지 않음’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림 III-42〉 중국 탈북자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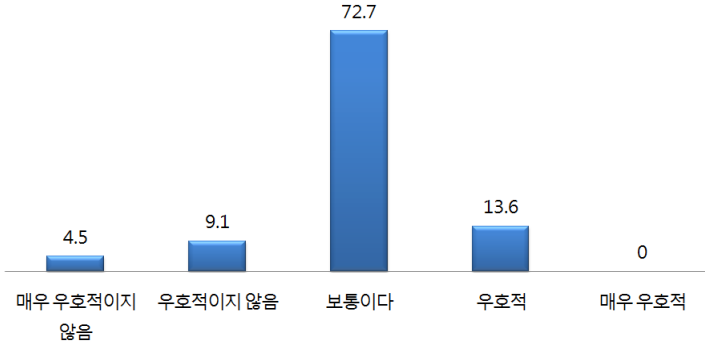
(단위: %)



한편,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한국에 우호적인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는 질문에서는 중국의 전문가들 중 72.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3.6%가 ‘우호적,’ 9.1%가 ‘우호적이지 않음,’ 4.5%가 ‘매우 우호적이지 않음’에 응답했다. 이 결과를 북한과의 관계와 비교하면,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매우 우호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0%였으나,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매우 우호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합계 13.6%나 차지하여,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한국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3〉 중국 탈북자 정책과 한국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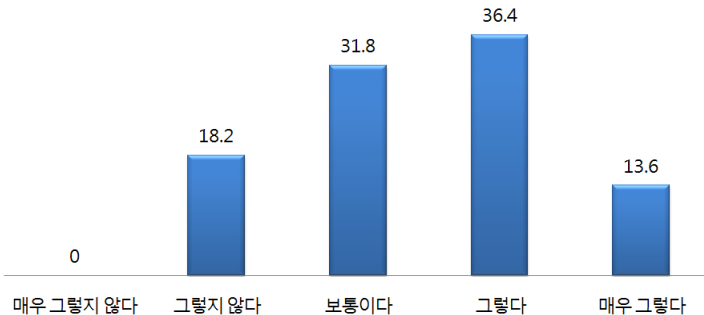
(단위: %)



한편,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발사,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남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서 외교부의 공식성명을 통해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핵 반대, 남북관계 안정 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성명 내용이, 한국 국민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중국 전문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36.4%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31.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18.2%,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공식성명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림 III-44〉 중국 외교부 공식성명 평가

(단위: %)



다. 중국 전문가 인식의 특징

중국에서 활동하는 40명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 실태에 관한 몇 가지 유의미한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록 조사 과정에서 일부 중국 전문가의 불성실한 응답 또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이 반영된 중국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중국 공공외교 일반에서 나타난 특징

중국 공공외교의 일반에 관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를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정부중심형이나 국가가 통제·관리하는 혼합형을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체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문가들은 정부부처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실업계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시한 반면, 국가 이미지 개선을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로 간주하고 있었음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를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아시아 지역을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변4국 전문가의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중국의 전문가가 중국의 공공외교 추진체제를 혼합형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주변국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당-국가 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공공외교의 추진 목표로 국가 위상의 제고를 선택한 주변국과 달리, 중국의 전문가는 국가 이미지 개선을 선택했는데, 이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 제기와 책임 있는 역할 요구에 대응해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책임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대외적 목표가 공공외교에 투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이 일본과 함께 공공외교의 중점 추진 대상 지역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선정한 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한반도가 중국의 공공외교에서도 상응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중국의 전문가들은 문화를 타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공공외교의 자산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문화적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추진을 중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에서 나타난 특징

한반도 통일관련 정책에서 나타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면, 동북아 질서 안정과 경제발전을 통일한국의 긍정적 측면으로 선택한 반면,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편향적 성격을 부정적 측면으로 선택한 바,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남북한 상호 불신을,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남북한 합의통일을 선택했고, 한반도 통일에 2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5년 내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지만, 만일 북한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한다면 권력 상층부의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고, 이에 대한 대비로 북한 난민 대책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중, 동북아 질서 안정과 경제발전을 통일한국의 긍정적 측면으로 꼽은 점, 한반도 통일 시기를 20년 이상으로 예상한 점, 합의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이상적 형태로 선택한 점, 5년 이내 북한 급변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점 등은 주변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유사하였다. 반면, 남북한 상호 불신을 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은 점, 한반도 현상 유지를 중국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평가한 점, 북한 핵 통제보다 북한 난민 대책을

I

II

III

IV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급변 대비책으로 선택한 점 등은 주변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상이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한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점 때문에 주변국에 비해 더 북한에 편향적인 중국의 인식이 드러난다. 즉, 중국은 스스로 객관적인 접근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의 입장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대북한 인식이 다소 편향적이다.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북한 핵이나 북한의 폐쇄정책을 지목한 주변국 전문가들에 비해, 이를 선택한 중국 전문가들의 비율이 낮은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와 아울러 북한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 핵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북한과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북한 급변 시 난민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서 나타난 특징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중국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를 보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나 그 성과를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공외교의 목표로, 정부부처를 주요 수행기관으로, 언론을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선택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를 보통 수준으로,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한국인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친밀도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순으로, 북한의 친밀도를 중국·러시아·미국·일본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공외교의 성과 평가나 수행 기관의 측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이 일반 공공외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중국 공공외교의 대상에 대한 응답과 주변국 전문가의 응답과 달리, 언론을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추진 대상으로 선택한 점은 특이하다. 이는 한국의 언론이 중국의 이미지를 왜곡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며, 한국에 대한 중국 공공외교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인의 주관적 판단이란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러한 인식이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4) 공자학원, 양안 관계,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특징

마지막으로 중국 특성에 따른 문항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중국의 대표적 공공외교 사례인 공자학원의 경우, 중국의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공공외교에서 공자학원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지만, 한반도 차원에서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했다. 이 점은 중국 정부가 문화적으로 유사한 한반도에서 공공외교의 수단과 대상으로 문화가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양안 관계의 경우, 중국의 전문가들은 공공외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경제적 혜택 제공을 인적·문화적 교류보다 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양안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지목한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에서도 ‘경제통상 관계 강화’를 가장 중시하는 데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유사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공공외교에서 경제적 수단을 중시해왔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만 주민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라 평가한 반면, 대만 정부의 태도는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양안 통일을 한반도 통일과 마찬가지로 20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안과 한반도 통일이 상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양안의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을 자극하거나, 반대로 한반도의 통일이 양안의 통일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지만, 양안과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안 통일과 관련한 중국 공공외교의 경험이 한반도에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전개될 수 있지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탈북자에 관한 설문 의 경우,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북한의 입장과 국제 여론을 고려해 결정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 중국의 전문가들은 탈북자 문제에서 한국을 제3국 내지 국제사회로 간주하는 인식을 보였다. 이어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한국에 우호적인지, 북한에 우호적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한국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이란 응답 결과를 보여준바, 앞에서 분석한 중국의 한반도 통일 관련 정책에서와 같이,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반도 공공외교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더 우호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중국이 북한 관련 사안에서는 물론이며,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에서도 북한을 의식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음을 보여 준다.



IV

결론: 통일관련 한국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공공외교는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세계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공공외교 기술과 정책들을 급속히 발전시켜 왔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공외교가 좀 더 정교해지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것들이 중국에 대한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는 연결되고 있지 않다. 서구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는 2006년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¹¹⁶

공공외교 연구에서 가장 곤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실태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이다.¹¹⁷ 우선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행해진 개별 프로그램이나 조치 수준의 효과를 국가 수준의 집합적 효과로 볼 때 발생하는 비합리성 때문이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 대해 가지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보통 정형화되어 연속성을 띠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면 한국의 통일과 같은 주제에 대한 한 나라의 공공외교의 실체를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숙원이고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임을 감안하면 여러 어려운 점이 따르지만,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중국의 공공외교 전반을 점검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되짚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1.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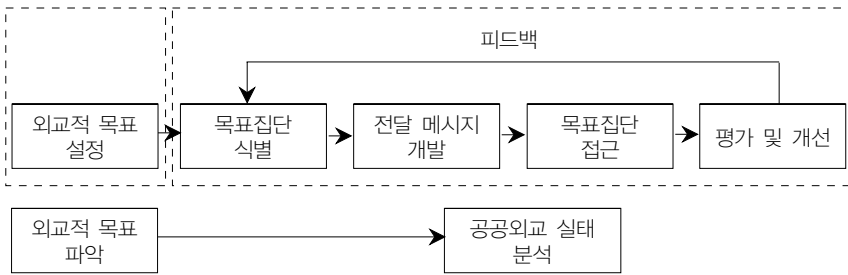
공공외교 실태 분석이나 그것에 대한 평가는 공공외교가 일반적으로 ‘외교적 목표 설정 → 목표 집단(target audience) 식별 → 전달 메시지 개발

¹¹⁶ Ingrid d’Hooghe, “The Expansion of China’s Public Diplomacy System,” Jian Wang (ed.), *Soft Power in China* (New York: Palgrave Mavmillan, 2011), p. 19.

¹¹⁷ Jian Wang, “Introduction: China’s Search of Soft Power,” 위의 책, pp. 13~14.

→ 목표 집단(target audience) 접근 → 평가 및 개선’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¹¹⁸

〈그림 IV-1〉 공공외교의 흐름과 본 연구의 분석틀



첫째,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서 목표 집단은 불분명하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가능하다면 상대국의 국민 전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에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을 목표 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중점 목표로 하는 집단은 뚜렷하지 않다. 가령, 본 연구에서 조사한 중국 공공외교 전문가들은 우리 언론을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추진 대상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을 지적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언론이 중국의 이미지를 왜곡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인데,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 전문가의 견해일 뿐,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가늠자는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평화의 중재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¹¹⁸ 김규륜 외,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 (서울: 통일연구원), p. 108.

싶어 한다. 중국 공공외교의 목표 중의 하나는 중국이 국제정치 공동체에서 신뢰할 만하고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도 적용된다. 즉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사 설문에 응답한 중국 전문가의 71%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자국의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종종 세계 도처의 고립된 정권과의 갈등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해 왔고, 몇몇 사례에서 적절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아 왔다.¹¹⁹ 대표적인 예가 6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중국의 이러한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 Public Opinion)은 한국을 포함한 21개 국에서 총 21,6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교 정책의 도덕성(morality)을 국가 간 비교하는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외교 정책 도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영국 BBC는 매년 각 나라의 국제적 역할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국민들에게 묻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5년·2007년·2008년·2010년 조사에서 다른 나라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I

II

III

IV

¹¹⁹ Ingrid d'Hooghe, “China’s public diplomacy system,” p. 27.

〈표 IV-1〉 각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적 평가 비율

(단위: %)

	2010년	2008년	2007년	2005년
독일	81.7	74.0	-	-
캐나다	76.9	-	73.3	68.3
영국	75.1	75.3	62.4	70.0
한국	74.7	-	-	-
EU	74.6	68.7	66.3	70.6
프랑스	68.4	67.9	53.3	71.9
미국	59.4	49.7	35.3	51.9
일본	58.4	37.8	28.7	38.1
인도	49.4	56.1	39.0	-
브라질	47.2	55.5	-	-
남아공	36.4	-	-	-
러시아	35.0	47.3	20.7	42.2
중국	34.8	43.0	29.8	48.6
이스라엘	25.5	24.3	23.5	-
파키스탄	14.5	14.6	-	-
이란	9.4	13.6	11.8	-
북한	5.8	16.5	12.3	-

* - 표시는 해당 연도 조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

출처: BBC·GlobeScan·EAI 공동 Global Poll (http://www.eai.or.kr/type_k/plList.asp?catcode=1110120000); 김선혁, “대내 공공외교를 위한 거버넌스,” 국제교류재단 제1차 연구용역보고서(2011), p. 25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10년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 국민들의 비율은 2005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처가 한국 국민들을 실망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민들의 상당한 수가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고 탈북자 송환 문제 등에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북한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과 중국의 국민 각각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과 9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8.1%가 북중관계의 강화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대답했다.¹²⁰

〈표 IV-2〉 북중관계 강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영향없음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모름
1.9	18.0	11.7	48.0	20.1	0.2

출처: BBC·GlobeScan·EAI 공동 Global Poll <http://www.eai.or.kr/type_k/plList.asp?catcode=1110120000>; 김선혁, “대내 공공외교를 위한 거버넌스,” 국제교류재단 제1차 연구용역보고서(2011).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민들은 44.6%가 미국이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중국은 15.5%만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목표 집단을 한국의 일반 국민으로 선정했다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위의 표가 보여준다.

둘째, 전달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 중국 정부가 공공외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외국 국민을 상대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 있어,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공외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중국,’ ‘중국인,’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¹²¹ 본 연구에서 자체 조사한 중국의 전문가들도 중국 공공외

¹²⁰ Jung-Nam Lee, “Faltering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e G2 Era,”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6* (October 2012), pp. 17~18.

¹²¹ 이희욱, “중국의 공공외교와 함곡적 함의,” 국제교류재단 1차 연구용역보고서(2010), p. 15.

교의 목표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한 것은 39%의 ‘국가 이미지 개선’이었으며, ‘국가 위상 제고’(25%), ‘경제적 이익’(21%), ‘안보이익 제고’(1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외교의 추진 목표로 ‘국가 위상 제고’를 우선적으로 지적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과는 다른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대외적 목표가 공공외교에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관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홍보하기보다는 위협론을 완화하는 데 머물러 있는 수준은 자연히 콘텐츠 부족을 불러온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일단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이중적 존재로서 딜레마에 놓이게 한다. 한국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불가결한 경제적 협력자이면서, 정치적으로는 한미동맹과 북한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대이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로 동북아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지만, 오랫동안 남다른 친선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이고 국가 안보 전략상 경시할 수 없는 우호국이다.

남북한 모두가 중국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을 편애하는 것이 아닌,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이 유지되고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란 단어는 가급적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언급해야만 할 때는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원칙만 되풀이하게 된다.¹²² 이러한 딜레마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내용을 빈약하게 만드는 첫째 원인이다. 남북한의 틈 속에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적극적 전개는 남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강대국의 이익이 교호하는 한반도에서 다른 강대국의 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 남북한

¹²² 『한중수교 공동성명』, 1992년 8월 24일.

이나 다른 강대국을 상대로 어느 한 쪽의 오해나 섭섭함을 유발하지 않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외교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구체적 실체가 빈약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전개하는 것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설문조사에서 중국 전문가들의 64.3%가 중국이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65%가 ‘보통’으로, 25%가 ‘낮다’고 평가했다.

셋째, 목표집단 접근에서 중국의 경우 제Ⅱ장에서 강조했듯이, 국가 주도성이 매우 강하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부상하기 위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인식해 오면서 공공외교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때문에 외교 당국 업무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제도화되고 실행되어 온 공공외교의 방향이 수정되게 되었다. 예컨대 원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국가 이미지 관리가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비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유동적이고 복잡해져서 해외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비정부적, 반관반민적 행위자가 폭넓게 존재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세계적 네트워크 속에서 외국의 공적·사적 행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국의 개인들과 시민사회 집단이 늘어나면서 국민 대 국민 외교, 국제 학술 및 비즈니스 협력, 문화 행사 등이 중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커졌다. 해외의 중국인 공동체인 화교 사회는 세계 도처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조직하고 거기에 참여한다. 중국의 블로그 공간 역시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여 중국 공공외교는 새로운 방향 정립을 통하여 새로운 역동성과 좀 더 많은 정통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공외교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공공외교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중국 정부가 공공외교의 목표에 맞춰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그 수단들을 기획하고 조율하면서 정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활동하도록 보장한다는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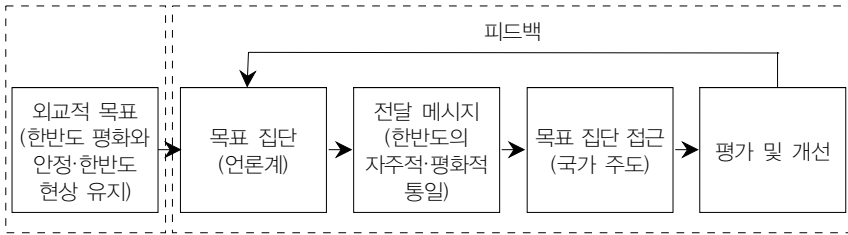
점이다. 반면 단점은 이 때문에 공공외교의 대상인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중국이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들과 그 수단들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권위주의라는 중국의 정치 체제 성격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중국 공공외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국 국민의 견해가 알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것은 정부가 정치적 자유와 시민 자유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민감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알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편이다.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권위주의 체제가 중국 공공외교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공외교에서 발견되는 국가 주도성은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공외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중국 정부조차 남북한의 중간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곤란한 영역이다. 또한 중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공외교는 국가가 철저히 기획하고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외교는 유연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국가 주도성을 피해야 하지만,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중국의 민간 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Ⅲ장의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도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첫 번째로 지적된 것은 정부부처이다. 전문가의 약 80%가 정부부처를 꼽았다. 그러나 이미 언급 했듯이, 그 성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흐름을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흐름



2. 대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과 과제

드라마, K-pop 등을 통해 ‘한류’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시민이 한국에 대해 떠올리는 국가 이미지나 국가브랜드가 아직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공외교의 후발국이지만,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 하여 국가 차원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험, 그것으로부터의 교훈은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 분석틀의 첫 번째 단계인 목표 집단 선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서 초점을 맞출 뚜렷한 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 중국을 상대로 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대한 중국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우호적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통일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 국민들이 통일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최소한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중적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에게 최근 한중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담한 추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국민들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다.¹²³

〈표 IV-3〉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민과 중국민의 인식

	다소 좋음					다소 나쁨				
	'07	'08	'09	'10	07-10	'07	'08	'09	'10	07-10
한국	65.5	36.4	58.9	50.8	-14.2	34.5	59.8	39.7	45.8	+6.1
중국	87.6	72.4	67.4	56.0	-32.6	6.6	16.4	21.8	38.9	+22.2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에 관한 여론조사(2007-2010)』; Jung-Nam Lee, “Faltering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e G2 Era,” *EAI 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6* (October 2012).

특히 한반도 통일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국민의 26.7%만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반대한다는 대답은 10.9%, 지지도 반대도 아니라는 대답이 50.5%였다. 초기에 한중 간 갈등은 주로 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발생했으나, 2008년 이후는 한미동맹·대북관계·북핵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외교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¹²⁴ 중국 국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소수이기는 하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특정 집단, 즉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전문가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중국 국민 전체에게 다가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연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한반도 통일관련 이슈는 복잡한 국제정세 요소가 포함된

¹²³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에 관한 여론조사(2007-2010)』; Jung-Nam Lee, “Faltering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e G2 Era,” *EAI 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6* (October 2012), p. 2에서 재인용.

¹²⁴ Jung-Nam Lee, “Faltering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e G2 Era,” p. 2, 20.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이슈이다. 일반 국민의 의견은 전문가 집단의 주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에 주안점을 둔 공공외교의 전개가 중요하다.

둘째, 전달 메시지 개발 측면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의 정돈이 필요하다. 중국의 전문가에게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50%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부정적’이라거나 ‘무관심’이라는 응답도 각각 25%로 과반을 차지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 전문가의 인식은 부정적인 셈이다. 통일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 다수가 ‘주변국에 대한 통일한국의 편향적 성격’과 ‘통일한국의 군사력 신장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꼽았다. 그만큼 군사적으로 강해진 친미 성향의 통일한국이 등장해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에게 한반도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국가를 지적하도록 한 설문과 주변국 중 한국이 친밀도를 가장 높게 느끼는 국가를 묻는 설문에서도 미국을 꼽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대중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통일한국이 친미 편향의 국가로 등장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대신 통일한국이 동북아 질서 안정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앞서 밝힌 중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1년의 여론조사에서 자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국가관계로 지적된 것은 미일관계(74.2%)와 한미관계(54.1%)이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북중관계(63.3%)였다. 즉 중국인들은 미일관계 및 한미관계에서 주요 동맹국인 미국이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자국 안보와 국가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주한미

I

II

III

IV

군의 존재를 지적했다. 중국 국민에게 한미동맹은 한중 간 불신을 야기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다.¹²⁵

또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라고 대답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한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데 따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III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이점 때문에 주변국에 비해, 북한에 더 편향적인 중국 전문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즉, 중국은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물론이거니와 주변국의 입장과 비교하면, 중국 전문가의 북한 인식은 다소 편향적이다.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북한 핵이나 북한의 폐쇄정책을 지목한 주변국 전문가들에 비해 이를 선택한 중국 전문가들의 비율은 낮다. 북한 핵에 의한 위협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핵보다는 북한과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급변 시 난민 대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 한반도 현상 유지보다는 통일 지지로, 북한 핵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에 더 동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목표 집단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통일관련 공공외교 ‘조정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¹²⁶ 본래 공공외교 활동은 중앙 집중적일 수가 없다. 공공외교 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고 그 수단 역시 매우 다양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합당한 공공외교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는 당의 영도 아래 정부 중심으로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독립적

¹²⁵ *Ibid.*, p. 13.

¹²⁶ 조정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유현석, “호주의 공공외교 조정메커니즘과 캐나다, 노르웨이의 사례,” 국제교류재단 2차 연구용역보고서(2011), pp. 23~25에서 따온 것이다.

으로 경쟁하면서 실행하는 정도가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의 경우는 공공외교 활동이 매우 분산적이다.

분산화된 공공외교 활동은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공외교 활동의 성과이다. 분산되고 통합되지 못한 목표를 추구하는 공공외교 활동은 대부분 효과를 내지 못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총합은 각자의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분산화된 추진체계에서는 종종 충돌하는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기도 하고, 한정된 공공외교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조정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정메커니즘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정메커니즘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의 통합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메커니즘을 외교통상부가 맡아도 되고,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되어 별도의 위원회가 담당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통일관련 공공외교 활동은 전체적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 공공외교의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통해 조정과 조율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대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조직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범정부적 목표와 그에 따른 각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대외활동의 방향을 정하며, 재원의 합리적 활용 등을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관련 공공외교가 비정파성을 담보해야 한다.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은 정권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일관성을 가지고 비정파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 대상은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관철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단시간에 친화성을 가지는 것이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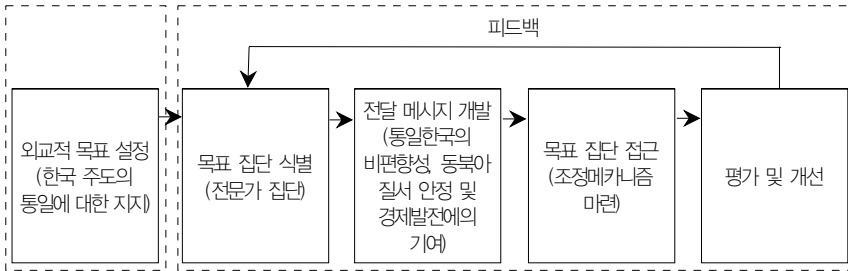
III

IV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이미지 전달과 네트워크 유지를 통해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⁷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전개할 때, 유의해야 할 과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3〉 대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



¹²⁷ 인남식, “이스라엘 공공외교의 배경, 전략 및 함의,” 국제교류재단 1차 연구용역보고서 (2010), pp. 12~14, p. 22.

참고문헌

1. 단행본

-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2011 한중 국민 상호 인식 조사』. 서울: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2011.
-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심두보 외. 『만나고, 배우고, 공감하기: 글로벌 언론인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2011-14).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2010.
-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자오치정. 『중국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가』. 파주: 나남, 2012.
- 전성홍 외. 『중국모델론』. 서울: 부키, 2008.
- Jervis, Robert.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Ning, Lu.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2000.
- Nye Jr.,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ed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_____. *The Powers to Lea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國務院台灣事務辦公室. 『中國台灣問題外事人員讀本』. 北京: 九州出版社, 2006.
- 宋強·張藏藏·喬邊 外. 『中國可以說不:冷戰後時代的政治與情感抉擇』. 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社, 1996.
- 齊建華. 『影響中國外交決策的五大因素』.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0.

- 中共中央组织部. 『中国共产党组织工作辞典』. 北京: 党建读物出版社, 2009.
-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 北京: 人民出版社, 2011.
- 中華人民共和國 政策研究司 編. 『2005年版 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5.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政策規劃司 編. 『2011年版 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1.
- 胡鞍綱. “對中國之路的初步認識.” 門洪華 主編. 『中國: 軟實力的方略』.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2007.

2. 논문

- 김선혁. “대내 공공외교를 위한 거버넌스.” 국제교류재단 제1차 연구용역보고서, 2011.
- 김애경. “중국의 공공외교-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불식을 위한 전략세우기.” KIEP 중국전문가 포럼 발표 논문, 2010.10.21.
- 김유리.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통해 본 중국위협론 논의의 재고찰.” 『동아연구』. 제63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2.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 송현호. “중국지역의 한국학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제35집 (한중인민학회), 2012
- 신중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 『국가전략』. 제15권 1호 (세종연구소), 2009.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0.
- 유현석. “호주의 공공외교 조정메커니즘과 캐나다, 노르웨이의 사례.” 국제교류재단 2차 연구용역보고서, 2011.
- 이원준. “중국의 외교정책과 공공외교- 중국 공공외교의 한계와 도전.” 『사회

- 과학연구논총』. 제24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 이장원. “중국 공공외교: 배경, 목표, 전략.” 『동서연구』. 제23권 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 이희옥. “중국의 공공외교와 합국적 합의.” 국제교류재단 1차 연구용역보고서, 2010.
- _____. “중국공공외교의 확산: 체계와 목표.” 『중국학연구』. 제54집 (중국학회연구회), 2010.
- 인남식. “이스라엘 공공외교의 배경, 전략 및 합의.” 국제교류재단 1차 연구용역보고서, 2010.
- 최관장. “소련 사회주의 해체이후 중국의 반화평연변정책(反和平演變政策)과 한반도.” 『슬라브연구』. 제8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2.
- 한석희.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변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화평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1집 3호 (신아시아연구소), 2004.
- Cowan, Geoffrey and Arsenault, Amelia. “Moving from Monologues to Dialogue to Collaboration: The Three Layers of Public Diploma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616, No. 1, March 2008.
- Cull, Nicholas J.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616, No. 1, March 2008.
- d’Hooghe, Ingrid. “The Expansion of China’s Public Diplomacy System.” Jian Wang (ed.), *Soft Power in China*. New York: Palgrave Mavmillan, 2011.
- Fewsmith, Joseph and Stanley Rosen.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Does Public Opinion Matter?.”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 Press, 2001.
- Gilboa, Etyan. "Searching for a Theory of Public Diploma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Vol. 616, No. 1, March 2008.
- Lee, Jung-Nam. "Faltering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e G2 Era."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October 26, 2012.
- Lilei, Song and Wang Yiwei. "Chinese Public Diplomacy toward Europe: Goals, Progress and Challenges."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1, No. 5, September/October 2011.
- Nye Jr., Joseph S. "Get Smart: Combining Hard and Soft Power." *Foreign Affairs*. Vol. 88, No. 4, July, 2009.
- Swaine, Michael D. "Chinese Leadership and Elite Responses to the U.S. Pacific Pivot."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8, August 6, 2012.
- Wang, Jian. "Introduction: China's Search of Soft Power." Jian Wang (ed.), *Soft Power in China*. New York: Palgrave Mavmillan, 2011.
- Yong Nam Cho and Jong Ho Jeong. "China's Soft Power: Discussions, Resources, and Prospects." *Asian Survey*. Vol. 48, No. 3, 2008.
- 賈乾初. "試論中國共產黨人對三民主義的評價與超越." 『燕山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10卷 第4期, 2009.
- 郭震遠. "台灣의 兩岸國家認同缺失及其對兩岸關係的影響." 『中國評論』. 2012年 8月號, 2012.
- 裘援平. "中國的和平發展與公共外交."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6期, 2010.
- 宮力·門洪華·孫東方. "中國外交決策機制變遷研究." 『世界經濟與政治』.

- 2009年 第11期, 2009.
- 檀有志. “公共外交中的國家形象建構.” 『現代國際關係』. 2012年 第3期, 2012.
- 杜力夫. “論兩岸和平協議的三大支柱與階段性進程.” 『中國評論』. 2012年 8月號, 2012.
- 刘国新. “中国新安全观的形成及实践.” 『思想理论教育导刊』. 2006年 第1期, 2012.
- 李默. “中国公共外交现状及发展建议.” 『消费导刊·理论广角』. 2007年 第5期, 2007.
- 李淑云. “信任机制: 构建东北亚区域安全的保障.” 『世界经济与政治』. 2007年 第2期, 2007.
- 徐莹. “中国公共外交的三大亮点.” 『今日中国论坛』. 2008年 3期, 2008.
- 石源华. “六方会谈机制化东北亚安全合作的努力方向.” 『国际观察』. 2005年 第2期, 2005.
- 聂映玉. “孔子学院概述.” 『上海教育科研』. 2008年 第3期, 2008.
- 孫哲. “中國外交思想庫.” 『中國外交』. 2004年 第11期, 2004.
- 沈强. “美國全球戰略調整: 戰略重心更多向亞太傾斜.” 『國際政治』. 2012年 第2期, 2012.
- 沈庶英. “孔子学院建设的若干思考——以中华文化走出去为视角.” 『中国高教研究』. 2012年 第5期, 2012.
- 吴庆才. “美国回应孔子学院事件 称尽量不让任何老师离美.” <<http://news.sohu.com/20120525/n344042779.shtml>> (검색일: 2012.10.16).
- 吴瑛. “中国话语的议程设置效果研究——以中国外交部新闻发言人为例.” 『世界经济与政治』. 2011年 第2期, 2011.
- 王存剛. “當今中國的外交政策: 誰在制定? 誰在影響?” 『外交評論』. 2012年 第2期, 2012.
- 王之緱. “公共外交: 中國準備好了么?” <<http://www.ftchinese.com/story/001030823?page=3>> (검색일: 2012.10.15).
- 游智偉·陳政一. “中共對臺政策之理性與組織過程分析.” 『中國大陸研究』.

第54卷 第4期, 2011.

李昊宇·馬坤. “中國東盟簽署宣言, 南沙不再建碉堡.” <<http://www.people-daily.com.cn/GB/junshi/20021111/863355.html>> (검색일: 2002. 11.11).

林紅. “和平發展形勢下台灣民衆的中國意識.” 『中國評論』. 2012年 5月號, 2012.

張志洲. “中國公共外交:讓世界了解一個真實的中國.” 『中國外交』. 2011年 第12期, 2011.

張清敏. “社會變遷背景下的中國外交決策評析.” 『中國外交』. 2006年 第6期, 2006.

鄭永年. “中國內部環境的變遷及其對外交的影響.”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8/forum_zp120221.shtml> (검색일: 2012.2.21).

趙可金. “建設性領導與中國外交轉型.” 『世界經濟與政治』. 2012年 第5期, 2012.

趙啟正. “由民間外交到公共外交.” 『外交評論』. 2009年 5月, 2009.

周建仁. “聯盟形成理論: 評估及對中國的政策啓示.” 『當代亞太』. 2012年 第3期, 2012.

湯紹成. “台灣認同問題的弔危.” 『中國評論』. 2012年 6月號, 2012.

韓方明. “我国公共外交的五大问题.”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txt/2012-02/27/content_24740442_2.htm> (검색일: 2012.10.15).

叶自成. “对中国和平发展与国际环境之关系的几点思考.” 『国际政治研究』. 2006年 第1期, 2006.

黃仁偉. “國際體系轉型與中國和平發展道路.”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2006年 第5期, 2006.

3. 기타자료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신문』.

『아시아 투데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http://baike.baidu.com/view/6213095.html>>.

<<http://cpc.people.com.cn/GB/64114/75332/>>.

<http://intl.ce.cn/zgysj/200907/21/t20090721_19584448.shtml>.

<<http://korea.cpc.people.com.cn/>>.

<<http://kp.china-embassy.org/chn/>>.

<<http://kr.cntv.cn/>>.

<<http://kr.people.com.cn/>>.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5/05/c_121381532.html>.

<<http://opinion.huanqiu.com/1152/2012-06/2847869.html>>.

<http://topics.huanqiu.com/Sino_SKorea/>.

<<http://world.people.com.cn/GB/15598781.html>>.

<<http://www.caifc.org.cn/kr/>>.

<<http://www.ceaie.edu.cn/>>.

<<http://www.china.com.cn/international/pdq/>>.

<<http://www.chinaemb.or.kr/kor/>>.

<<http://www.china-korea.org/html/node/56-1.html>>.

<<http://www.csis.edu.cn/>>.

<http://www.eai.or.kr/type_k/pList.asp?catcode=1110120000>.

<<http://www.einmin.co.kr/index.asp>>.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450471.html>>.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460923.html>>.

<http://www.gov.cn/jrzg/2011-03/31/content_1835289.html>.

<http://www.gov.cn/ldhd/2009-07/20/content_1370171.html>.
<http://www.gov.cn/zwgk/2005-06/02/content_3618.html>.
<http://www.gwytb.gov.cn/gtb/201101/t20110109_1685185.html>.
<http://www.mofat.go.kr/state/publication/2003/.../612_file>.
<<http://www.peopledaily.com.cn/GB/guandian/26/20020806/793438.html>>.
<<http://www.scio.gov.cn/>>.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20519>>.

『自由時報』.

『中国新闻网』

『人民日報』.

『學習時報』.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중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웅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C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중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중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종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태, 최수영, 임순희, 조장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장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총괄보고서)
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